

전략연구 2016-07

충청남도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

김 은 경

발 간 사

최근 들어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재난, 각종 범죄, 환경피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인 관리대책 및 전문인력의 보장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안전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 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등과 같은 물리적 안전관리 방안에 앞서 안전문화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안전문화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범 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조성 정책에 의한 대응보다는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충청남도만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충청남도 지역에 적합한 생활영역 부문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도민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충청남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안전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정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김은경 박사님과 김희태, 김민지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자문위원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안전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맞는 생활여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1차적인 방안은 시설물 설치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계획과 관련한 계획 역시 육상과 해양에 어울리는 각각의 지역맞춤형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충청남도는 해양안전문화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서해안 일원(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의 10,000m²(연면적) 면적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교통, 소방, 민방위 등 육상의 안전체험장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상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안전문화와 관련한 각종 체험관 등의 건립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안전처를 위시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시설 체험과 연관된 캠페인 홍보 위주의 문화 조성에서 “안전문화 조성 및 의식의 전환”까지 나아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안전문화’이며,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 적합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영역 부문의 안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 검토 및 분석이다.

둘째, 충청남도의 현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지역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외 주요 안전문화 벤치마킹으로 충남 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이론 및 선행연구, 법제도 및 추진체계 분석, 충남도청의 안전문화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범 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조성 정책에 의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충청남도만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초지자체별 위험환경을 진단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안전 활동을 파악하여 실제 지역안전환경 및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문화, 안전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으로서 기존의 안전문화에 대한 필수요소를 확인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문화 조성 활동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이다. 둘째, 충청남도의 현재 안전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행되는 안전활동 및 안전문화 상태를 점검하며, 현재의 안전문화 활동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계획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재난관리 4단계에 대응한 고도화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이지만, 기존에는 그 대응과 예방의 1차적인 방안으로서 시설물 설치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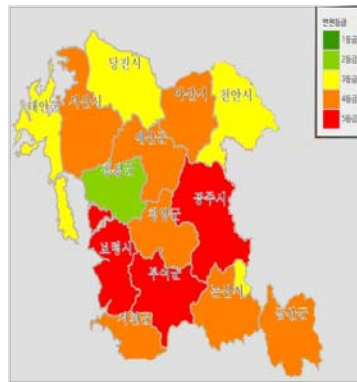
2. 주요 연구내용

◇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은 각 지자체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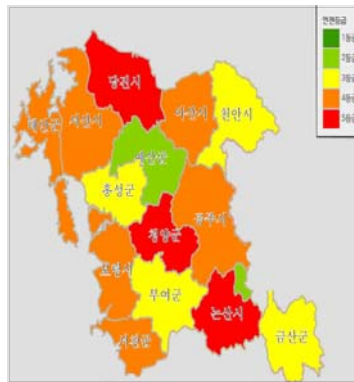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외국인 비율과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안전환경에 있어서는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한 가장 최근 안전지수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을 분석한 결과¹⁾, 지역안전지수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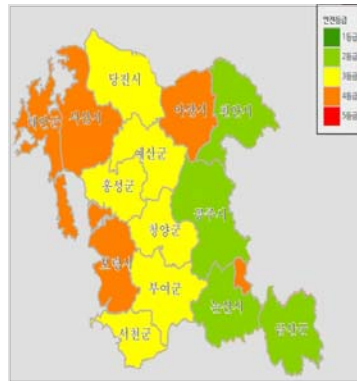
내 시군의 안전환경을 비교해 보면, 화재와 교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조하다. 화재, 교통사고 모두 도 단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하위 등급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화재는 계룡(5등급), 공주, 보령, 논산, 당진(4등급), 자연재해는 해안 지역 주변, 범죄는 농업지역 중심, 안전사고는 공주시, 자살에 대한 위험은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등, 감염병은 논산시에서 위험요소가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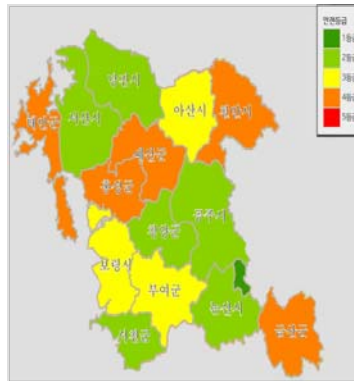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안전지수 지도(화재)



〈그림 2〉 지역안전지수 지도(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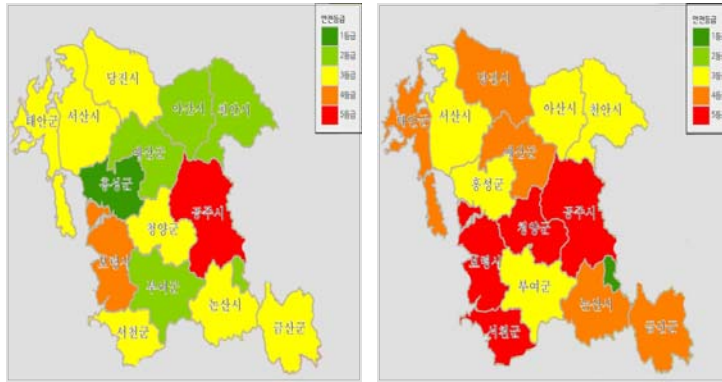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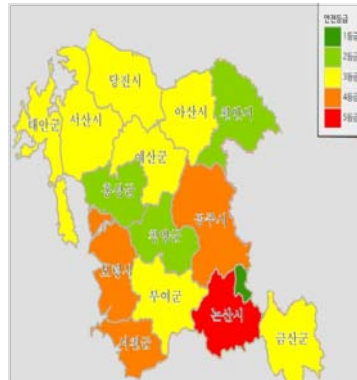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안전지수 지도(범죄)

1) 2016년 8월 기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에서의 결과값을 활용함.



〈그림 5〉 지역안전지수 지도(안전사고) 〈그림 6〉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살)



〈그림 7〉 지역안전지수 지도(감염병)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안전지수의 그 외 부문 특히 자연재해 부문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부문의 경우 태안군을 비롯한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과 같은 농림어업 지역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청남도의 안전문화실태는 기초지자체별 자체적인 안전문화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및 특징을 최근 6개월 동안 기사(충남일보) 분석을 통해 기초단체별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의 안전문화 의식 조성을 위한 비전과 세부 목표를 뒷받침하는 기초 지자체 중심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분	시·군	주요 활동
해안 지역	태안군	- 태안소방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자치소방단 발대 (2016.09.01.) - '청정 태안' 주민과 관광객이 만들어내다! (2016.08.23.) - 태안해경, 휴가철 맞아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2016.08.04.) - 태안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활동 시작 (2016.07.12.)
	서산시	- 서산소방서, 폭염 속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근무 중 이상무! (2016.08.17.) -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 시민들 '호응' (2016.07.22.) - 서산시, 자율방재협의회 간담회 개최 (2016.06.29.)
	홍성군	- 예고된 '치매전쟁터' 지역의 주민이 허락하지 않는다! (2016.09.02.) - 정신건강 취약지 건강마을 만들기 '함께해 유(you) 마음튼튼 학교' 운영 (2016.08.23.)
	서천군	- 온(on) 동네방네 설료 (2016.09.08.)
	내륙 지역	
	당진시	- 당진시 , '아동안전지도' 제작 (2016.07.14.) - 당진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출범 (2016.07.11.)
	공주시	- 공주시, LP가스시설 자율 안심 순찰 활동 (2016.09.12.)
	논산시	-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구조활동 돌입 (2016.07.06.)
	청양군	- 마을 화재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킨다! (2016.09.07.)

〈그림 8〉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SWOT분석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을 수립한다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SWOT분석을 수행하면 다음 <그림 9>와 같이 분석되며, 그 결과에 의한 전략은 SO전략-WO전략-ST전략-WT전략 수행이 가능하다.

① 강점 Strengths

- 충청남도청 안전문화교육팀 및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직의 신설
- 기초 지자체별 활발한 안전문화 활동
- 협의회 정기적인 활동 재가동

② 약점 Weakness

- 매년 아이디어 중심의 연계성이 약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 기초 지자체의 연계성 낮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③ 기회 Opportunities

- 국민안전처 차원의 지역컨설팅 지원
- 범 정부 및 시민들의 안전정책에 대한 갈증

④ 위협 Threats

- 홍보 및 캠페인,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
- 총체적으로 낮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 외국인, 고령자 비율 증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강점(Strengths) • 충청도청 안전문화교육팀 조직 신설 • 기초 지자체별 활발한 안전문화 활동 • 협의회의 정기적인 활동 재가동	약점(Weaknesses) • 매년 아이디어 중심의 연계성이 약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 기초 지자체의 연계성 낮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기회(Opportunities) • 국민안전처 차원의 지역컨설팅 지원 • 범 정부 및 시민들의 안전정책에 대한 갈증	SO 전략 • Top-Down 전략: 도 차원의 전략 수립 • Bottom-Up 전략: 시민 중심의 전략 수행 • 전략수립 및 집행의 네트워크 전략	WO 전략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안전컨설팅 적극 활용 •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및 운영
위협(Threats) • 홍보 및 캠페인,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 • 총체적으로 낮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 외국인, 고령자 비율 증가	ST 전략 • 도 차원의 조직적인 안전문화교육 내용 홍보 및 안전의식 전개 활성화 •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안전문화운동 전파 및 의식 강화 전략	WT 전략 • 외국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 지역별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안전문화 조성 활동 전개

〈그림 9〉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실태 SWOT 분석

SWOT분석에 의한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수립될 수 있다.

○ SO 전략

- Top-Down 전략: 도 차원의 전략 수립
- Bottom-Up 전략: 시민 중심의 전략 수행
- 전략수립 및 집행의 네트워크 전략

○ WO 전략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안전컨설팅 적극 활용
-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및 운영

○ ST 전략

- 도 차원의 조직적인 안전문화교육 내용 홍보 및 안전의식 전개 활성화
- 취약 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의식 강화 전략

○ WT 전략

- 외국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 지역별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안전문화 조성 활동 전개

◇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방안은 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문화’를 조성하는 과제는 끊임없는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업이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수준까지 향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정착되며, 그 결과로 안전성고가 달성될 수 있다(류영아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림 10>과 같은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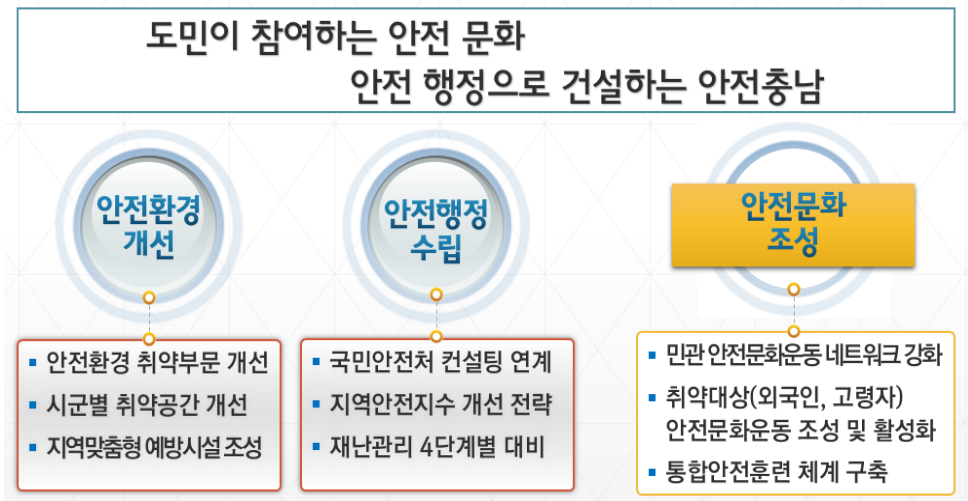


<그림 10>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은 연구의 서두에 밝힌 안전문화 발달과정과 같이 각 단계별 1) 안전문화 도입기, 2) 안전문화 도약기, 3) 안전문화 성숙기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안전문화 도입기에는 기본적인 안전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활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행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비로소 안전문화 조성의 초기 기획과 그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안전문화 도약기에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행정을 기반으로 안전환경이 개선되고 결국 안전문화 조성이 촉진되기에 이른다. 최종적인 충청남도 안전문화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춘 안전환경 개선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지역별 자치화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안전 행정으로 건설하는 안전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방안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환경과 안전행정이 완성된 모습으로 갖춰갈수록 안전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해 보면, 우선 안전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안전행정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을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약한 부문 및 물리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환경 취약부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인된 취약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알맞은 예방시설의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충청남도의 안전행정 수립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을 설정할 수 있다. 최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행정 지원책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 지원하고 있으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특정 기초 지자체에는 특정 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기존 재난관리 방안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나 안전 캠페인 활성화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관 안전문화운동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취약대상(외국인, 고령자) 안전문화운동 조성 및 활성화, 통합안전훈련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그림 11〉 ‘안전한 충청남도 만들기’ 기본 방향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문화운동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충청남도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우선, 국내외 안전문화운동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안전문화운동 및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문화 조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서 우선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하여 전국을 비교하는 중요 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안전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각 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청에서는 다른 광역자치체에서는 보기 드문 ‘안전문화교육팀’을 조직하여 안전한 충남이 전국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활동하고 있다. 행정적인 틀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세부 전략들이 치밀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살펴 본 충청남도의 현 시점 안전문화 운동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SWOT분석을 수행하여 SO전략-WO전략-ST전략-WT전략 등 가능한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서 1) 안전문화 도입기, 2) 안전문화 도약기, 3) 안전문화 성숙기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문화 도입기에는 기본적인 안전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행정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비로소 안전문화 조성의 초기 기획과 그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도약기에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행정을 기반으로 안전환경이 개선되고 결국 안전문화 조성이 촉진되기에 이른다. 최종적인 충청남도 안전문화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춘 안전환경 개선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지역별 자치화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안전 행정으로 건설하는 안전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방안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환경, 안전행정,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비전 설정을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현황을 도 행정 차원에서만 거칠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다소 불분명한 원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없지 않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 배경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용도로 추후 연구나 분석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안 및 추진 전략들이 매우 참신하거나 새롭게 제시되는 사항이 아닌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안전문화 조성 방안은 도입기, 도약기, 조성기의 3단계를 중장기간 동안 꾸준히 수행해야만 이를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나 인구 구조에 의한 해석은 다소 사회과학적이고 지리적, 도시계획적 접근을 수행한 것으로 안전환경에 대한 공학적이거나 정량적인 분석이나 접근과는 다소 다른 해석 결과를 유추했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존에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한 축적된 연구 방법론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과학적인 다소 정성적인 분석이 향후 연구에도 중요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안전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기대 효과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5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7
1. 용어의 정의	7
1) 안전문화의 개념	10
2)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	10
2. 국내외 정책 동향	12
1) 국내 안전문화 관련 정책	12
2) 해외 안전문화 관련 정책	18
3. 선행연구 분석	29
제3장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및 안전문화 실태 분석	33
1.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	33
1)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	33

2) 생활안전 실태 분석	37
2.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실태 분석	45
1) 지자체 중심의 안전문화 실태 및 특징	45
2)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및 특징	52
3.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특징 및 시사점	60

제4장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 64

1. 기본방향	64
2. 전략별 정책과제	66
1) 안전환경 개선	66
2) 안전행정 수립	68
3) 안전문화 조성	69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	----

표 목 차

<표 2-1> 국내외 안전문화의 정의	8
<표 2-2>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9개 실천운동 과제	16
<표 3-1>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자 수 현황(2014)	36
<표 3-2> 지역안전지수(화재) 등급별 지자체 현황	38
<표 3-3> 지역안전지수(교통) 등급별 지자체 현황	39
<표 3-4>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 등급별 지자체 현황	40
<표 3-5>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별 지자체 현황	41
<표 3-6> 지역안전지수(안전사고) 등급별 지자체 현황	42
<표 3-7> 지역안전지수(자살) 등급별 지자체 현황	43
<표 3-8> 지역안전지수(감염병) 등급별 지자체 현황	44
<표 3-9>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세부 과정	46
<표 3-10>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세부 내용	49
<표 3-11> 안전문화 실천 및 행동을 위한 기획홍보 세부 내용	50
<표 3-12>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6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연구흐름도	6
<그림 2-1> 안전문화 3대 축	11
<그림 2-2>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델(The Safety Culture Excellence Evolution Model)	12
<그림 2-3> 전국 안심마을 시범 현황	17
<그림 2-4>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구성 현황(2016.06.)	17
<그림 2-5> 재난 대비 사이클	20
<그림 2-6> FEMA의 Are you Ready? 가이드북	21
<그림 2-7> 뉴욕의 Citizen Corps 유인물	22
<그림 2-8> 영국의 THINK! 캠페인 포스터(운전중 핸드폰사용)	25
<그림 2-9> 영국의 THINK! 캠페인 포스터(도로 위 자전거 운행)	26
<그림 2-10> 일본의 제로재해전원참가운동 방법 예시	28
<그림 2-11> 행동변화와 문화변화 모델(Dejoy, 2005)	30
<그림 2-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와 제도간의 관계	32
<그림 2-13> 안전문화 수준과 재해율과의 관계	32
<그림 3-1> 충청남도 인구 수 추이(1995~2014)	33
<그림 3-2> 충청남도 외국인 수 추이(1995~2014)	34
<그림 3-3>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수 비율(2014)	35
<그림 3-4> 충청남도 고령자 수 추이(1995~2014)	35
<그림 3-5>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자 수 현황(2014)	36
<그림 3-6> 지역안전지수 지도(화재)	38
<그림 3-7> 지역안전지수 지도(교통)	39
<그림 3-8>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연재해)	40

<그림 3-9> 지역안전지수 지도(범죄)	41
<그림 3-10> 지역안전지수 지도(안전사고)	42
<그림 3-11>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살)	43
<그림 3-12> 지역안전지수 지도(감염병)	44
<그림 3-13>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조직도	45
<그림 3-14> 2016 안전문화 교육홍보의 추진 전략	47
<그림 3-15> 청정 태안을 위한 주민 합동 활동(충남일보)	53
<그림 3-16> 태안시,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충남일보)	54
<그림 3-17>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충남일보)	54
<그림 3-18> 서천군, 자원봉사 온(ON) 동네방네 활동(충남일보)	56
<그림 3-19> 공주시, 자율 안심 순찰 활동(충남일보)	58
<그림 3-20> 논산시, 시민수상구조대 교육(충남일보)	59
<그림 3-21>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실태 SWOT 분석	63
<그림 4-1>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	65
<그림 4-2> '안전한 충청남도 만들기' 기본 방향	6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충청남도는 2016년 현재 8,214km²로서 전국 총면적 100,295km²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8개 시, 7개 군로 구성되었다. 그 중 공주시가 864.1km²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6km²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청은 기존에 대전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 왔으나, 최근 2013년 1월에 드디어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여 진정한 충청남도의 新 행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내륙 도시 및 농촌, 해안의 도시 및 농촌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복합적인 지리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환경적인 여건이 이렇다보니 지역적, 지형적 특성에 맞춘 지역의 세부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안전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맞는 생활여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1차적인 방안은 시설물 설치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계획과 관련한 계획 역시 육상과 해양에 어울리는 각각의 지역맞춤형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충청남도는 해양안전문화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서해안 일원(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의 10,000m²(연면적) 면적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교통, 소방, 민방위 등 육상의 안전체험장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상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안전문화와 관련한 각종 체험관 등의 건립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안전처를 위시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시설 체험과 연관된 캠페인 홍보 위주의 문화 조성에서 “안전문화 조성 및 의식의 전환”까지 나아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범 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조성 정책에 의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충청남도만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초지자체별 위험환경을 진단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안전 활동을 파악하여 실제 지역안전환경 및 안전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문화, 안전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으로서 기존의 안전문화에 대한 필수요소를 확인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문화 조성 활동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이다. 둘째, 충청남도의 현재 안전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행되는 안전활동 및 안전문화 상태를 점검하며, 현재의 안전문화 활동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계획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재난관리 4단계에 대응한 고도화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도민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충청남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안전문화 전파의 중추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충청남도 차원에서 안전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문화교육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충남 건설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정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를 위시한 국민안전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안전문화 정책 기초 하에 道 단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내재화된 안전문화 정책으로 조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안전문화’이다.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 적합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영역 부문의 안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 시설 구축 등과 같은 물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외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 하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안전문화의 특징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우선 이론적 검토는 안전문화의 개념,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해외 사례분석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및 대표적인 안전문화 조성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충청남도의 현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 충청남도는 최근 자체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펴하고 있어 중앙정부 공모전에도 관련 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요약하여 정리하고 추가적인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충청남도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안전문화 조성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할 수 있는 충청남도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충남도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현장감 있는 인터뷰와 지역 신문 및 의회 보고 자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청남도만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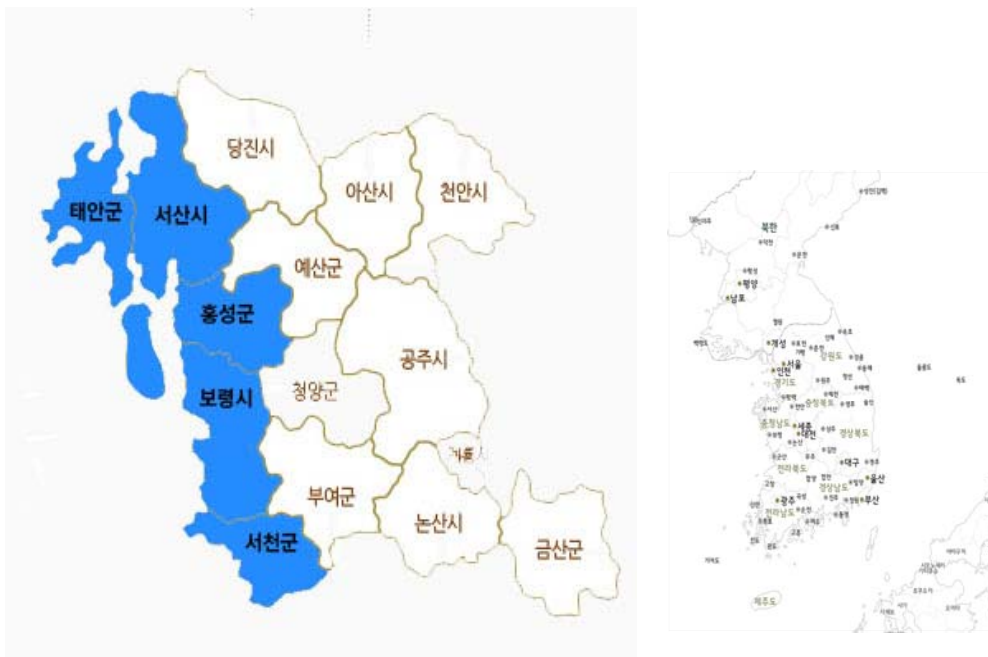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정의된 바 있다.

김승호 외(2015)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라고 하였다. 성기환(2004)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널리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보편적인 안전문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림 1-1>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충청남도의 서편에 해당하는 시·군은 해안지역, 충청남도의 동편에 해당하는 시·군은 내륙지역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내용상 충청남도의 각 시·군의 지리적 특성에 알맞은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므로 공간적인 구분을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 충청남도의 해안지역 :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 충청남도의 내륙지역 :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그림 1-29〉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 법제도 및 추진체계,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한다.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가 발간한 정책자료, 기사, 인터넷 정보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충남도청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충청남도의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는 충청남도의 안전문화운동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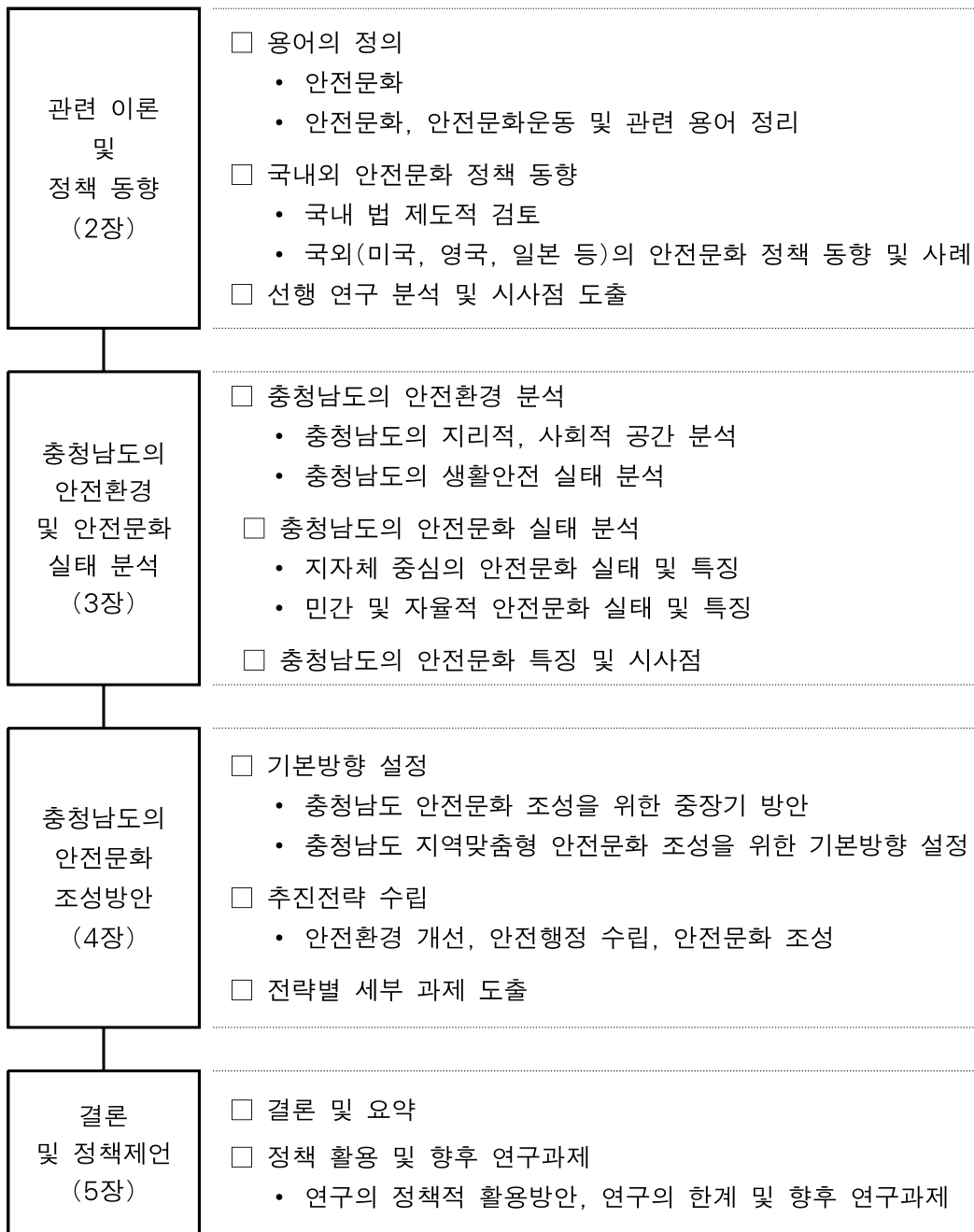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방법과 전체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안전문화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기존의 안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본 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국내와 국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관련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들 정책들이 효과적인지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바탕 및 근거가 되는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실태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시한 충청남도에서의 안전문화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충남도청의 안전문화교육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최신의 충청남도 안전문화 실태를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와 제3장 충청남도 안전문화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가장 최근의 중앙정부 안전문화 기조를 이어받아 충청남도가 지닌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며, 전략별 주요과제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요약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향후 진행되어야 하는 연구 과제를 밝힌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1. 용어의 정의

1) 안전문화의 개념

극심한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급증, 경제성장에 의한 패해로 인한 사회재난의 발생,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 안전관리체계와 개개인의 안전의식 부재, 안전불감증 등에 의해 대형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대형화를 예방하고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자연재해에 국한된 협의의 안전도시 개념에서 최근에는 광의의 안전도시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안전문화 정착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안전(Safety)’은 사전적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개개인이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안전증진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형복, 2016).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제연합재난저감전략(UN-ISDR)에서는 자연 혹은 인위적 위해와 취약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나 예상되는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과 안전의 관계를 통해 안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위험단계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 존재하며, 위기단계는 위험요인이 현실화된 인지된 혼란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고, 재난단계는 결과론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그 결과가 부정적인 위기이며, 안전단계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혹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정지범, 2009).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

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 처음 사용²⁾되었다(오금호 외, 2006). 다양한 안전문화의 정의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한 조직의 안전보건문화는 안전보건관리의 형태 및 효과성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몰입을 결정하는 개인 및 그룹의 가치 태도 인식 능력 그리고 행동유형의 결과물이다. 긍정적인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된 조직은 상호간의 신뢰에 따른 의사소통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 예방조치의 효과를 자신있게 인정하는 것에 의해 구별된다.”이다(어기구 외, 2010). 다만, 학술적으로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의 하부체계로 연구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오금호 외, 2006). 가장 최근 국내 정책연구에서의 합의되고 있는 정의로는 “안전에 대한 공유된 행태, 신념, 태도와 가치”로서 ‘안전문화’를 설명한다(정지범 외, 2014).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은 <표 2-1>과 같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학자마다 다른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믿음, 가치와 같은 의식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태, 행동양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최호진, 2015).

〈표 2-1〉 국내외 안전문화의 정의

Fang <i>et al.</i> (2006)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일련의 널리 퍼져있는 지표, 믿음 및 가치
Richter & Koch (2004)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지침이 되는 일과 안전에 대하여 공유하고 학습된 의미, 경험과 판단
Mohamed (2003)	조직문화의 하위체계로 조직의 지속적인 안전 성과와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태를 의미
Pidgeon (2001)	위험과 안전과 관련되어 형성되어지는 일련의 가정 및 이와 관련된 관행을 의미
Cooper (2000)	문화는 사람(심리), 직무(행태) 및 조직(상황) 간의 다양한 목표지향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안전문화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안전문화란 조직의 지속적인 보건 및 안전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의 태

2) 여기에서 ‘안전문화’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한다(오금호 외, 2008).

구분	
	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의 하위요소
Guldemund (2000)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의 한 단면
Glendon & Stanton (2000)	훈련 및 개발과 같은 인적자원의 특성 이외에 태도, 행태, 규범 및 가치와 개인적인 책임 등으로 구성
Hale (2000)	위험 및 위험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범과 가치로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 믿음 및 인식
Cox & Fin (1998); Lee (1998); Wilpert (2000)	조직의 안전문화란 조직의 보건안전경영에 대한 몰입, 유형 및 역량을 규정하는 개인 및 집단의 가치, 태도, 인지, 역량, 행위유형의 산물
Eliff (1999)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위치와 무관하게 조직 내에서 과실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에 의해 지원받을 때에만 생성 가능한 것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 (1999)	경영자, 감독부서, 경영체계 및 조직의 인식과 관련되어 기업 내에서 제기되는 공식적 안전문제와 관계됨
Helmreich & Merritt (1998)	집단 내의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모든 성원들이 집단의 안전규범을 기꺼이 지지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른 성원들을 지원하는 공유된 인식
Mearns, Flin, Gordon & Fleming (1998)	특정한 집단의 성원들이 위험 및 안전과 관련해 공유하는 태도, 가치, 규범 및 믿음
Flin, Mearns, Gordon & Fleming (1998)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해 공유하는 태도 및 견해를 의미함. 이러한 안전문화는 안전 분위기(safety climate)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
Carroll (1998)	안전보건문화란 모든 집단의 성원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및 공공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Lee (1996)	조직의 보건과 안전관리 또는 보건안전에 대한 유형과 능률성 및 현신을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식, 능력, 행태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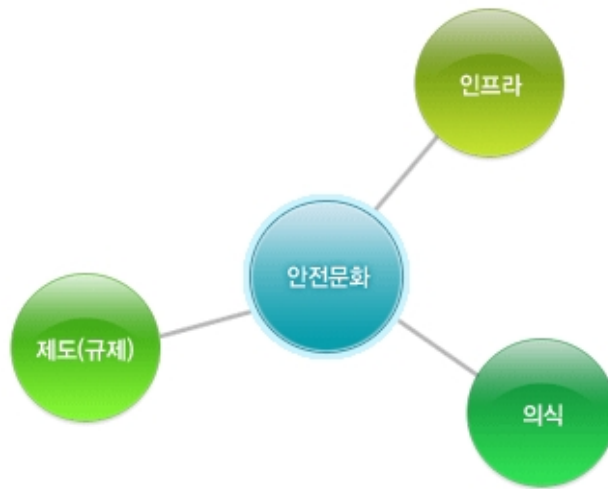
Berends (1996)	조직의 구성원의 아전에 대한 집합적 정신적 체계화
Geller (1994)	완전한 안전문화 (a total safety culture: TSC)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평상시에 안전을 추구하는 상황
Ostrom <i>et al.</i> (1993)	안전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행위, 정책, 절차에서 명료화된 조직의 믿음, 태도에 대한 인식
Pidgeon (1991)	노동자, 관리자, 고객, 시민이 위해나 상해로 간주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관련된 믿음, 규범, 태도, 역할,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관습의 조합
International Safety Advisory Group (1991)	조직 내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문제의 중대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안전문제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특성과 태도의 조합
Cox & Cox (1991)	안전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노동자의 태도, 믿음, 인식, 가치를 재인식하게 만드는 것

출처: 박홍운 외(2011)에서 재인용.

2)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비상관리국(FEMA)에서는 공유되는 가정(assumption)과 믿음이 조직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조직에서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FEMA, 2015a).

김근영 외(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 안전문화의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안전에 대한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을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공단 역시 안전문화의 3대 축을 인프라, 안전제도, 안전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2-1). 여기서 인프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및 안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안전제도(규제)는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제도 등을, 마지막으로 안전의식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로 구성된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문화홍보).



〈그림 2-1〉 안전문화 3대 축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이와 같이 안전문화를 인프라, 제도/규제, 의식의 3개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라 할 때, 안전문화의 조성은 안전관리 과정의 모든 요소가 결합해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문화 조성은 조직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조직의 안전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재검토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진, 2016).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태도 및 가치가 변화하고 행동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는 안전관리의 전 과정이 안전문화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최호진, 2016). Mathis & Galloway(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인식과 태도, 가치가 의사결정 및 기대목표 설정,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경험과 사례,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성과가 다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델’(그림 2-2)로 제시하고 있다(최호진, 2016).



〈그림 2-2〉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델(The Safety Culture Excellence Evolution Model)

출처: 최호진 외(2015).

2.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안전문화 관련 정책

(1) 법 제도적 현황

국내에서는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의식 고양을 위해 안전문화와 관련한 법률 및 법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법적 근거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안전문화’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기까지 실체적 근거법이 없었던 관계로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와 같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기의 기본법에서 ‘안전문화’ 관련 법 조항이 반영된 것은 2013년 8월 6일, 제8장(안전문화 진흥)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4년 12월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현재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7가지 권고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³⁾. 결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안전문화’의 법적 정의는 ‘안전문화활동’의 정의를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은 상기 법률 제3조(정의) 9의 2에서 밝히는 바처럼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4년 2월 5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장에도 ‘안전문화 진흥’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 5월에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6285호) 내에 ‘안전문화 진흥’에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하였다. 현재 동 시행령 내에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9개의 법조항이 제정되어 있다.

2015년 5월에 개정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85호)」의 ‘제2장 국민안전처’ 관련 조항에는 제3조(직무)에 국민안전처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하부조직)과 제12조(안전정책실)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해 안전정책실을 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85호)」의 제12조 내용을 근거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67호)」¹⁸⁷⁾의 제8조(안전정책실)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안전문화교육과를 신설하였다. 안전문화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지역안전공동체 육성,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관리, 국민안전의 날 운영 등 총 8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에서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대응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동 매뉴얼이 주요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3) 다만,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와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은 삭제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 참조).

테두리 안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은 지역만의 안전환경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초가 되는 자료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법적인 근거가 2014년에 마련된 ‘안전지수관련 내용’이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에서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지수의 주요 부문은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 값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상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지수’로 명명하고 2015년에 공표하기로 한 바 있다(서울경제, 2015년3월29일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가 1~5등급별로 나뉘어 ‘생활안전지도’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하였으며, 지역별 안전도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도시와 농촌 등 상황이 비슷한 지자체별로 나뉘어 공표된다. 지역안전지수의 산출은 5개 분야(재난, 교통, 치안, 생활, 보건·식품안전), 9개 부문(자연재해, 화재, 교통,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으로 점수와 함께 등급별로 공개된다(김은경, 2016).

(2)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정책

과거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1995년 당시 부산 한진 중공업 선박화재(‘95.2.7) 사고를 계기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지시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5월에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1차 회의(국무총리 주재)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때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관 협의체인 안전문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5년 8월 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가 개소되어 시도지역협의회 및 지역사무국이 구성(17개소)된 것이다. 안전문화추진위원회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의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96년 제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최호진, 2016).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안전문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민·관 합동 위원회의 안전문화 운동 집행을 전담하고 있던 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안전문화추진본부의 업무가 흡수되었던 것이다. 이후 2008년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문화 업무를 이관 받아 안전문화 총괄 기능을 수행하였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정부의 안전정책의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안전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작은 관심을 통해 확보된다. 개인들이 생활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2013년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5월 30일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하였다. 80여 개의 민간단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조직은 사회안전,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위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서 4대 테마 9개 실천운동 과제를 발표하고, 안문협 주관으로 관련 시민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실천과제에는 1990년대 중반 안전문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년간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거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다.

국내에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2014년으로서 안심마을 조성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심마을 사업은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안전행정부의 조속한 추진으로 10개의 안심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공공기관, 민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불량식품 근절운동이 사회안전 또는 생활안전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를 사회분야 안전실천 과제 중 3번째로 설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문화 운동의 4대 분야 중 교통안전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생활도로 30km/h 이하 서행하기 등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는 정지선 및 표지판 지키기, 보행자와 수신호하기 등이며, 생활도로 30km/h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이면도로 등에서 안전하게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지도, 계도활동을 말한다.

2016년 현재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는 기획홍보를 비롯하여 사회, 교통, 생활, 산업 안전 각 분과별로는 관련분야 12개 정부부처와 함께 14개 공공기관 및 관련 분야 51개 민간단체,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그림 2-4).

〈표 2-2〉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9개 실천운동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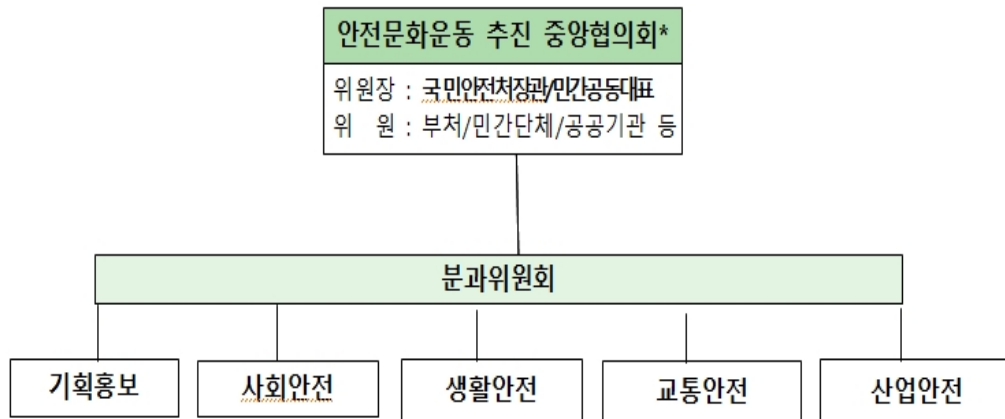
사회안전	안심 사회 (Safe Society)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클린 인터넷(폭력, 음란물 NO)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생활안전	안심 생활 (Safe Life)	1가정 1안전요원
		비상구 확인하기
교통안전	안심 운전 (Safe Traffic)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생활도로 30km/h 이하로 서행하기
산업안전	안심 일터 (Safe Work)	작업 전 후 안전점검 습관화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출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년 7월 5일자).



〈그림 2-3〉 전국 안심마을 시범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4.03.12.일자).



〈그림 2-4〉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구성 현황(2016.06.)

출처: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3년 7월 5일자).

2) 국외 안전문화 관련 정책

안전문화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운동전개 방식은 각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이 성숙된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환경이 다른 선진국의 안전문화 형성과정을 고찰하여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 영국의 안전문화운동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안전문화 정책

① 개요 및 특징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의 특징에 주별, 또는 시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전문화운동의 경우 FEMA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정부 안전문화운동 정책의 큰 틀을 따르고 있다(최호진, 2015). FEMA가 단순히 안전문화운동 관련 교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Ready 가이드북과 Tool-kit 등의 실질적인 지침을 내리고 CitizenCorps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봉사활동조직을 구성하여 전국 어디에나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최호진, 2015). 물론 교통안전문화 정책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의 정도, 세부 운영 기준 및 활동 등은 지역사정에 맞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중앙정부-주 정부-시 정부가 일관적인 정책을 같이 형성한다(최호진, 2015).

미국의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정부의 FEMA에서 운영하는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EMI)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비영리기관의 안전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호진, 2015). EMI 커리큘럼은 특정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기관에서 안전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력별로 단계별 수업이 이루어진다(최호진, 2015). EMI는 보름 내외의 커리큘럼을 통해 이론적 기초와 실전 안전사고 대비 관리법을 교육하며, 1단계 수업을 마친 이는 다음 단계

수업도 들을 수 있어 계속적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 연방정부에 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최호진, 2015). National Safety Council의 경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NSC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최호진, 2015). 수강생들은 방어운전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은 물론 교육과정을 통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최호진 외, 2015).

② 주요 사례

□ 정부 주도 (FEMA) 모든 위험요인(all-hazards) 대비 운동

미국 연방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FEM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방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부터이다. 1802년 뉴햄프셔주에서 일어난 큰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채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1800년대 전반에 걸쳐 전국 곳곳에 큰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시 재난 생존자들의 재정적 형편을 돕기 위하여 의회에서 임시법을 통과시켰다(최호진, 2015). 초기 산불에 국한되었던 연방정부의 역할은 기존 지방정부와 민간협력 위주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최호진, 2015). 1950년 의회에서 연방재난보조프로그램 (Federal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을 통과시키며 홍수, 가뭄, 허리케인,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통하여 구호를 지원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최호진, 2015). 1960년대에는 미국주택도시개발부에서 Federal Disaster Assistance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재난 생존자의 주거 및 다른 구호를 시작하였고, 의회에서는 National Flood Insurance Act를 통과시켜 주택소유자들이 홍수 상황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FEMA, 2010).

현재의 재난체계가 갖춰진 것은 1970년대 연방의회가 Disaster Relief Act를 통해 연방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면서 재난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세금과 대출을 통한 경제적 보조를 늘여갔다(최호진, 2015). 전국의 크고 작은 재난 대응을 총괄해오던 FEMA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된다. 테러 이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가 신설됨에 따라 2003년 FEMA를 DHS 산하로 편입하였고 2005년에는 4가지 프로그램(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s, Citizen Corps, Metropolitan Medical Response

System, Assistance to Firefighters Grants)이 국토보안부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조정 대책처로 배정되었다(FEMA, 2010).

2005년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수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회는 Post 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RKEMRA)를 통과시켜 FEMA는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 보다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계획하게 된다(최호진, 2015). FEMA는 재난대비 사이클(그림 2-3)을 구성하여 모든 재난 상황을 준비하고, 재난 상황에서 보호하고, 대응하고, 회복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대응프레임워크(National Response Framework)를 개발한다. 1992년과 2004년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었으나 2008년에 개발된 이 프레임워크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터넷공격, 테러 등 모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FEMA,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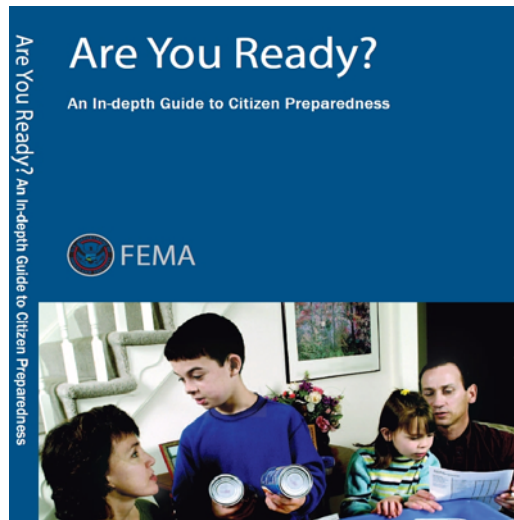
〈그림 2-5〉 재난 대비 사이클

출처: 최호진 외(2015).

* 주요 내용 :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Ready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서 연방정부기관인 FEM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기구,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Ready 프로그램은 2008년 FEMA가 시작한 대국민홍보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기본적 준비성을 향상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최호진, 2015).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보를 용도 및 계절, 재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식 홈페이지인 Ready.gov에서는 각지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각 가정마다 재난에 대해 쉽게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Ready 캠페인 가이드북(Are You Ready?)은 가족이 모여앉아 재난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FEMA의 Are you Ready? 가이드북

출처: FEMA(2014).

* 주요 내용 : EMI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FEMA에서는 재난대비 전문가 교육을 위해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EMI)를 운영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비영리기관과 자원봉사기관의 리더 중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호진, 2015).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부 과정은 수료 가능하다. EMI에서는 수준별로 일반과정과 전문기술교육인 Independent Study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FEMA, 2015a). 특히 EMI는 대학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무원 및 지역사회 안전관리 훈련에 힘쓰고 있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 Citizen Corps 프로그램

Citizen Corps는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연방 프로그램들을 조직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자원의 중복이 없도록 조정한다(최호진, 2015). 구체적인 지역사회 시민참여는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National Volunteer Fire Corps, Neighborhood Watch, Medical Reserve Corps, Volunteers in Police Program과의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FEMA, 2011: 4-5).



〈그림 2-7〉 뉴욕의 Citizen Corps 유인물

출처: 뉴욕비상관리센터 홈페이지(www1.nyc.gov).

* 주요 내용 :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CERT는 1985년 Los Angeles 소방청 재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책임감을 고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이 성공이 알려지며 1993년 연방정부는 FEMA가 CERT를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최호진 외, 2015).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재난상황에서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게 훈련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최호진 외, 2015). 자원봉사자들은 Volunteer Protection Act로 보호를 받는다(CERT Los Angeles 홈페이지).

(2) 영국의 안전문화 정책

① 개요 및 특징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내무성을 중심으로 범정부협력체(Gross-Government Respect Agenda)를 구성하여 전국지역안전계획(National Safety Plan)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범죄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 영국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 주도하에 지역주민, 자치단체, 경찰, 민간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인 ‘안전도시 운동(Safer City Program)’을 실시한 것이다(류영아 외, 2014).

이처럼 영국 중앙정부의 안전문화운동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Cabinet Office의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상황을 정리하고 담당 부처가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즉각적이고 일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지만, 재난별로 지정된 담당 부처(lead government department)가 비상상황 시 실질적인 수습을 책임지기 때문에 부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최호진, 2015). Cabinet Office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National Risk Assessment 기반으로 작성되는 국가재난대비계획(Emergency Plan)은 부처별 구체적인 재난 대처 계획, 준비, 훈련, 연습 등을 준비를 포함하고 다부처 간의 협동 계획도 허용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최호진 외, 2015).

재난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지만 일상적 안전문화운동은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최호진, 2015). 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서 명시한 대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Local Resilience Forum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기업, 자원봉사 단체, 종교 단체, 보건단체 등과 팀으로써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Community Emergency Plan을 수립하고 Community Risk Register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최호진, 2015).

② 주요 사례

☐ NRCP(The National Resilience Capabilities Programme)

NRCP는 영국 국무조정실 (Cabinet Office)에서 주관하며, 사고, 자연재해, 인재 등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의 극복과 정부의 응답을 위한 대응능력 고취가

목적이다(최호진, 2015). 대응능력 고취를 위해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각각의 워크스트림으로 분류하고, 능력의 현재 레벨을 모니터링 하며 식별한다(최호진, 2015). 이 후 시민 위험 상황 대비 준비 및 능력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확인받고, 각각의 워크스트림은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최호진, 2015). 각각의 워크스트림은 각 부처들의 책임이며,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은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 때,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은 지역지방정부부(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의 회복 및 재난위기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대응의 협업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위기 대응능력 고취를 위한 업무 정보를 수집한다(최인호 외, 2015).

□ IME(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민방위법에는 국민에게 위험 발생유무에 대한 통보 및 경고를 강제화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IEM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최호진, 2015). IEM은 <그림 3-26>과 같이 예측(Anticipation), 평가(Assessment),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a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로 분류되는 6가지 대응활동으로 구성된다(이영재 외, 2012). IEM은 재난 예방 및 방지의 한계 인지를 기반으로, 재난 이 후의 회복력(Resilience)을 중점으로 운영된다. 국가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IEM이 운영되며, 지역단위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위해 지역단위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통합위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공식적인 지침서로서 “Emergency Preparedness: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를 발간하고 있다.

□ THINK! 캠페인

Think! 캠페인은 2000년 교통부가 도로안전공공캠페인의 명목 하에 “Tomorrow’s roads: Safer for everyone”이라는 정부의 도로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최호진, 2015). Think! 캠페인은 교통부와 도로안전공무원, 긴급 서비스 팀, 군대, 운전 지도자 그리고 다른 도로안전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도로안전캠페인을 전달하기 위해 협업하여 진행되었다. Think! 캠페인은 1994~1998년과 비교하여 2000~2009년을 기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의 수가 44%의 절감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최인호 외, 2015).

Think! 캠페인은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상기시켜서 자신을 지키고, 남을 지키는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Think! 캠페인은 책임감 부여를 통해서 독려된다. Think! 캠페인의 우선순위는 “Road User Safety Division”에서 공무원과 교통부의 공공캠페인부서가 함께 정한다. 캠페인의 주제 선정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빈도가 높은 곳과 국가적인 발안제시에 의해 공익적으로 가장 우선이 될 만한 것을 선정한다(그림 2-7).

근래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Think! 자전거 안전 캠페인은 7개 도시에서 더 확대하여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충돌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행동방식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로 규칙을 상기시키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그림 2-8).



〈그림 2-8〉 영국의 THINK! 캠페인 포스터(운전중 핸드폰사용)

출처: 영국 THINK! 홈페이지(think.direct.gov.uk).



〈그림 2-9〉 영국의 THINK! 캠페인 포스터(도로 위 자전거 운행)

출처: 영국 THINK! 홈페이지(think.direct.gov.uk).

(3) 일본의 안전문화 정책

① 개요 및 특징

일본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는 (재)전국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련 단체에 파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국안전협의회는 성격은 민간단체들의 연합회로서 안전과 관련된 단체로 구성되며, 시민단체가 포함된 통합기구라고 볼 수 있다(나채준, 2013). 안전협의회는 총리실 산하에 속해 있으며, 안전문화 전반을 총괄하고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별 해당 분야의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국안전협회에서 하는 일을 협조한다

(송병길, 2016). 이를테면 교통안전은 운수성, 화재예방은 소방성, 학교안전은 문부성 등이 담당하는 체제이다. 각 기관별로 역할상의 구분은 없으며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담당하는 구조이다(오연천 외, 1999; 김근영, 2012).

② 주요 사례

□ 전국 안전 주간

전국 안전 주간은 “산업계의 자주적인 노동재해방지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널리 일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활동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전국 노동위생 주간

전국 노동위생 주간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확보,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에 몰두하는 주간이다(송병길, 2016). 1950년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이면서 국가적인 주간이다. 전국 노동위생 주간은 국민의 노동위생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업장의 자주적인 노동위생관리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 확보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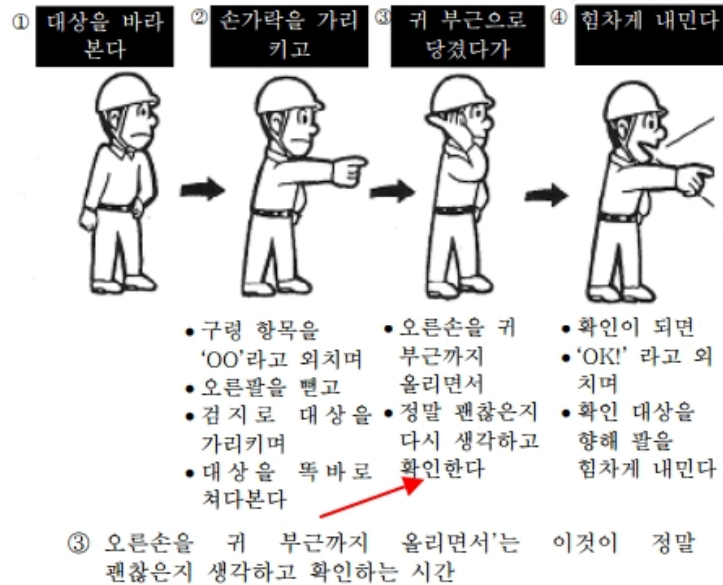
□ 연말연시 무재해 추진 운동

연말연시 무재해 추진 운동은 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안전이나 건강 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연말연시를 무사고로 보내고 밝은 연초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후생노동성 후원 하에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 주관하는 운동으로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간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근영, 2012).

□ 제로재해전원참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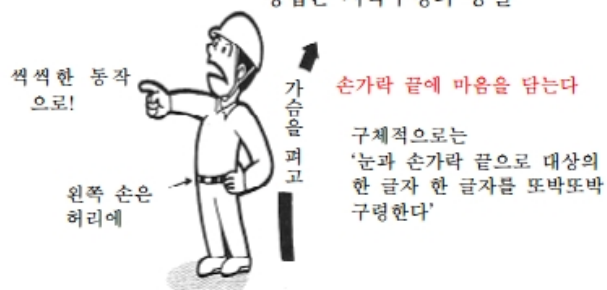
일본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apan Industrial Safety & Health Association; JISHA)는 1964년 소위 고도경제성장시기에 노동재해방지단체법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노동재해방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창립 이래 노동재해방지에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는데, 제로재해전원참가운동은 협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경과했을 무렵, 노동재해 방지활동에 있어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전미안전평의회(NSC)에서 'Zero in on safety'(안전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QC 활동과 같은 기법을 참고로 하고 체계화한 운동으로서 1973년에는 구 노동성의 운동 후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지목창화의 기법

방법은 지목구령과 동일



〈그림 2-10〉 일본의 제로재해전원참가운동 방법 예시

출처: 제로재해운동기법 내부자료.

3. 선행연구 분석

잊기 어려운 국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안전불감증과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안전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급급한 모습한 연출되어 왔다(김승호 외, 2015).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그의 저서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에서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을 소개하였다. 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는 숫자만으로 표현해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로 적용되어 설명된다(두산백과, doop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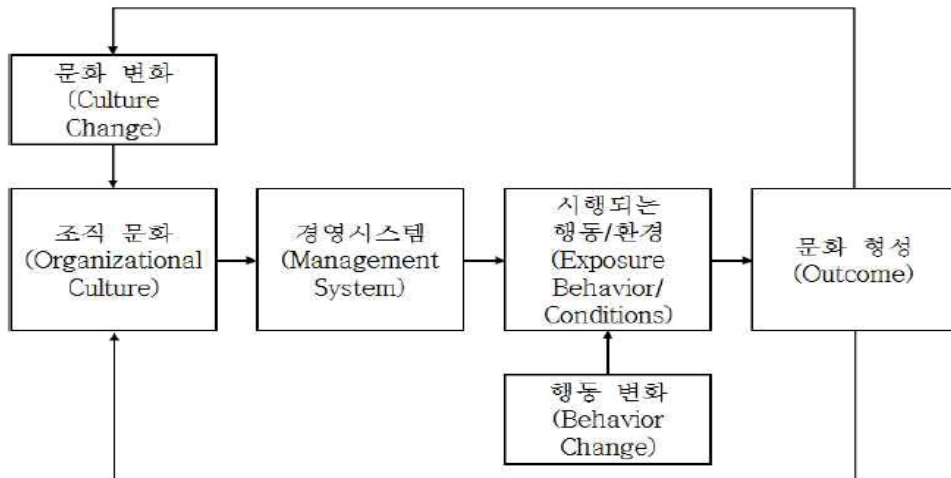
2014년 6월, 한국방재학회 정상만 회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의 국가안전처는 재난관리체계를 ‘자연·인적·사회재난’으로 일원화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가 ‘재난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특히, 기 작성된 매뉴얼에 보면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구조본부장을 맡게 되어 있고, 유관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이 사고 발생 초기에 대응을 못했던 것은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에 잘 대응하려면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몸에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황발생 시에는 매뉴얼을 찾아 읽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 반사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Berends(1995)는 최초로 안전문화의 형성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규범과 믿음으로 구분하고, 규범은 개인(수동과 능동), 상호작용(지원과 의사전달), 조직(환경설계, 행동조정성, 안전문제처리)으로 재분류된다. 믿음의 경우 안전의 제어가능성, 개인에 의한 조정가능성, 사고의 원인, 인간특성, 안전한 작업의 결과와 상황의 평가로 나뉜다.

Guldenmund(2000)는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안전태도가 하드웨어/물리적 환경, 소프트웨어, 사람과 행동의 4가지 범주로 되어 있고, 상황, 문화, 절차가 안전문화 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aridah et al.(2009)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건설업 조직 대상으로 안전문화 형성의 요인을 연구하고 그 요인을 심리, 행동, 상황이라는 관점과 범위로 특징을 분류하였다.

Dejoy(2005)는 안전문화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변화 모델과 문화변화 모델을 소개

하였다. 안전문화 형성의 접근법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두 가지 모델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2-11).



〈그림 2-11〉 행동변화와 문화변화 모델(Dejoy, 2005)

출처: 이형복(2015).

행동변화 모델은 사회과학분야의 행동변화 이론과 안전공학 분야의 행동기반안전이론을 통합한 행동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변화 모델은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변화와 행동변화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채준(2014)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법·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안전문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상위법에서 조차 실질적인 재난안전문화에 대한 강력한 권고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지적한 사례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윤종현(2015)은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국가의 재난안전문화와 관련된 개념적 구성요소와 기존 법령이 중복적으로 존재하여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애로를 검증하였다. 또한 여전히 안전문화 대상 계층에서 취약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기존의 안전문화 법·제도가 새로운 구성을 통해 단순히 문화형성이 아닌 행태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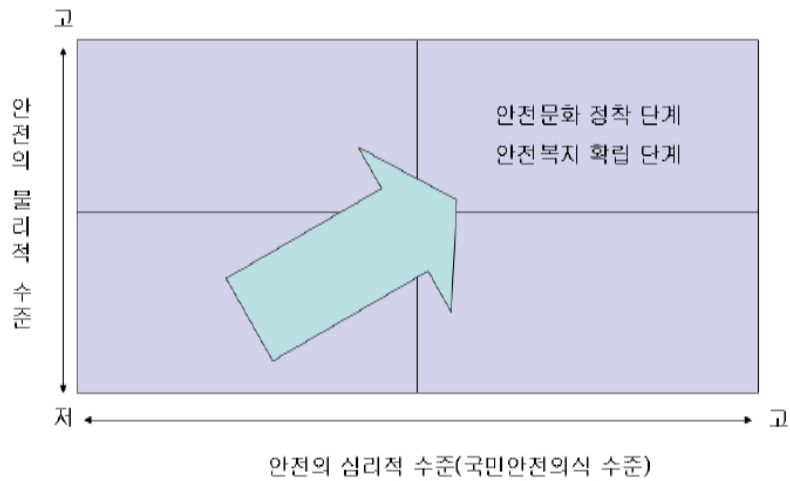
안규호(2007)는 안전문화 정착 초기 시기에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이 미흡할 당시, 연구를 통해서 국외의 안전문화에 대한 선행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결과

로 국내 대형사고에 이은 조속하고 긴급한 복구 후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민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세운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오금호 외(2008) 역시 당시의 안전문화 활동이 단편적이며 연속성이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문화진흥법(가칭) 마련 및 안전문화활동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행태가 유발되어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다.

최근 문창국(2015)와 유재명(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민간봉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류현숙(2012)의 연구에서도 국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스마트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국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스마트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민간 역할에 대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안전문화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인자임과 동시에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되는 문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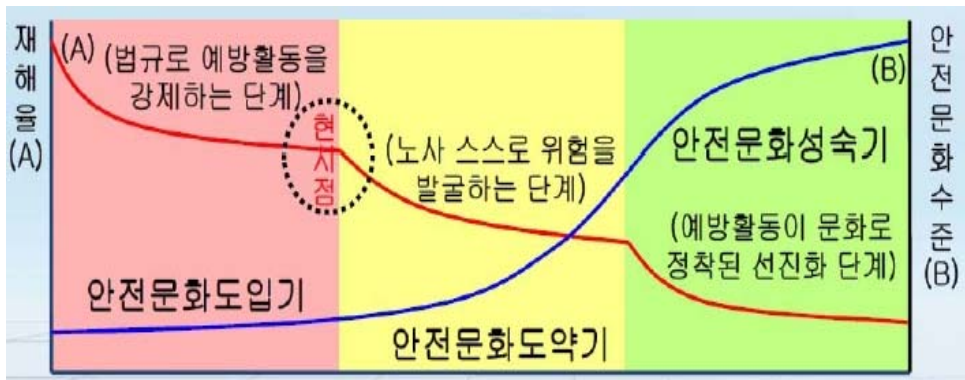
가장 최근 홍재봉(2016)은 도농 복합도시의 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앙정부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종합안전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고무적인 일이나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국 140여개 이상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체험시설도 체험종목을 세분화하여 공개해 시민들이 종목별로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안전화를 추구해야 하며 안전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때 안전문화가 정착되며 안전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그림 2-12). 특히 우리나라는 <그림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문화도입기와 안전문화도약기의 과도기 상에 있어 재난이나 위험에 둔감해서 안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사회의 안전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류영아 외, 2014).



〈그림 2-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와 제도간의 관계

출처: 류영아 외(2014).



〈그림 2-13〉 안전문화 수준과 재해율과의 관계

출처: 류영아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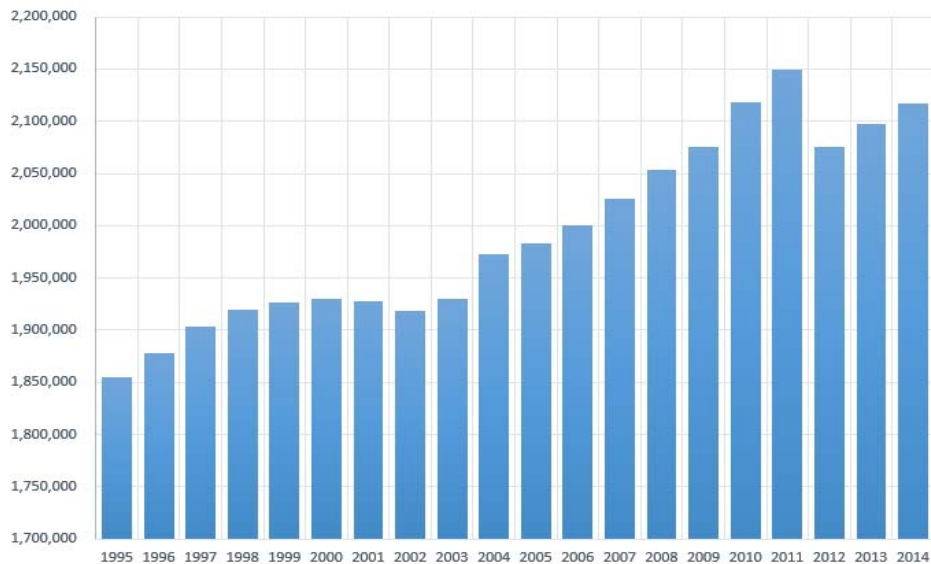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 즉 도심과 농촌, 내륙과 해안이 공존하는 지역적인 특징 및 인구구조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각 권역별 재난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이 단순히 1차적인 홍보나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식’으로 자리잡아 장기적인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및 안전문화 실태 분석

1.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

1)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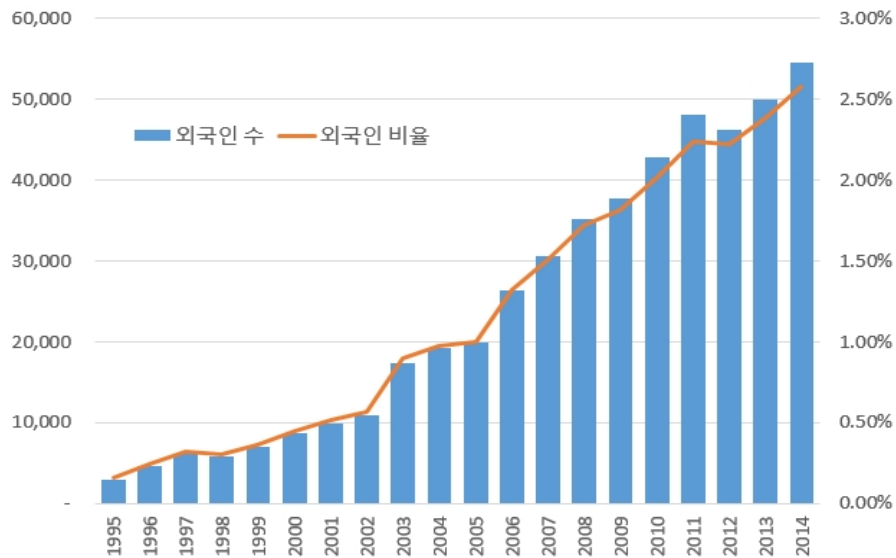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행정구역의 통합, 변경 등의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의 갑작스러운 감소 현상은 새로운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면서 연기군을 편입하였고 그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3-1〉 충청남도 인구 수 추이(1995~2014)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충청남도의 인구 증가 추세에는 외국인 유입 증가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에는 최근 20년 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자료로 확보가능한 2014년 기준 충청남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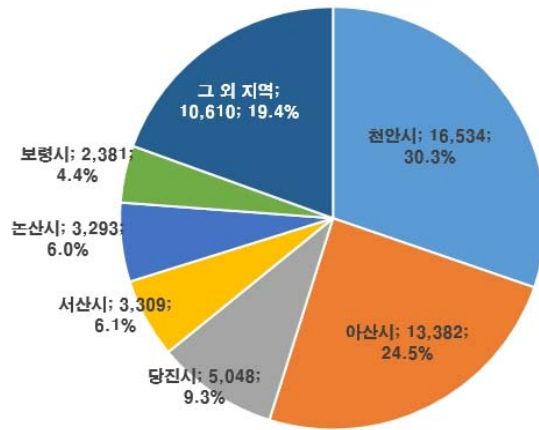


〈그림 3-2〉 충청남도 외국인 수 추이(1995~2014)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다만, 15개 시·군 지역 중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일부 시·군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 집계된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거주 등록된 외국인 비율은 천안시 16,534명 (30.3%), 아산시 13,382명(24.5%) 순으로 전체 충청남도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두 지역에 집중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이들 외국인은 ‘천안 외국인 전용 단지’를 비롯한 아산 신항만 인근의 산업시설에 근무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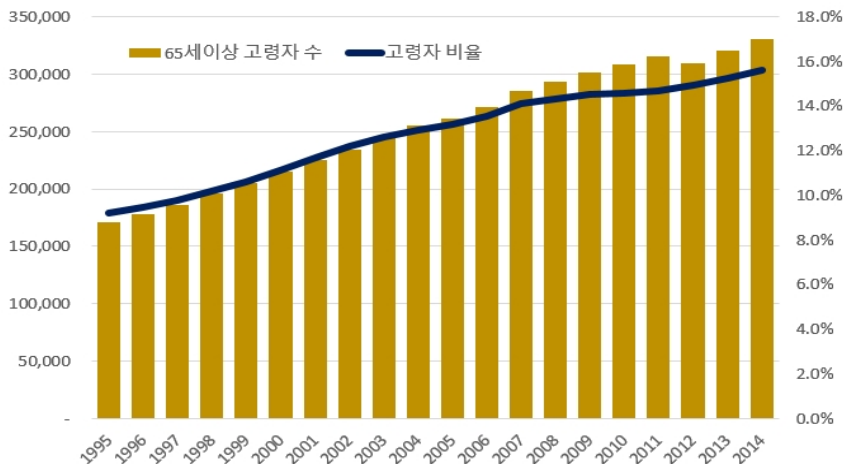
4) 외국인 근로자 안전 비상 천안·아산 3달간 2명 사망(대전일보, 2016년 6월 17일자.)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17915



〈그림 3-3〉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수 비율(2014)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충청남도의 인구 구조상 또한 유의깊게 살펴 봐야 할 대상이 바로 ‘고령자’이다. <그림 3-4>에서 보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고령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포를 고려해 볼 때, 고령자 수의 증가가 어린 연령대의 증가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어 실제 고령화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충청남도 고령자 수 추이(199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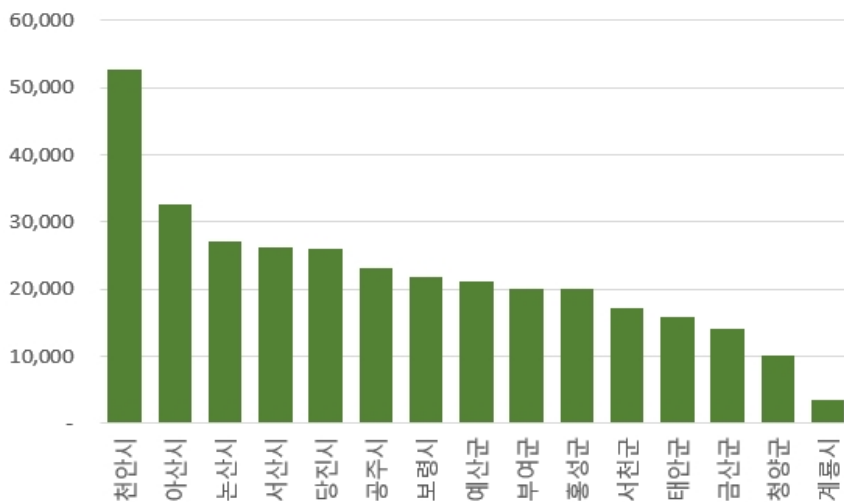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충청남도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표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안시(15.9%), 아산시(9.8%), 논산시(8.2%) 순으로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그림 3-5).

〈표 3-1〉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자 수 현황(2014)

충청남도	330,807	100.0	예산군	21,036	6.4
천안시	52,610	15.9	부여군	20,078	6.1
아산시	32,581	9.8	홍성군	20,006	6.0
논산시	26,997	8.2	서천군	17,192	5.2
서산시	26,187	7.9	태안군	15,795	4.8
당진시	25,975	7.9	금산군	14,019	4.2
공주시	23,092	7.0	청양군	9,976	3.0
보령시	21,817	6.6	계룡시	3,446	1.0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그림 3-5〉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자 수 현황(2014)

자료: 제55회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2015).

2) 생활안전 실태 분석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한다. 상기 법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제정한 바 있다.

지역안전지수란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 통계를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⁵⁾에 따라 계산한다(국민안전처). 등급부여는 시·도, 시·군·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지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로 한다. 해당 분야는 모두 7가지로 ① 화재, ② 교통사고, ③ 자연재해, ④ 범죄, ⑤ 안전사고, ⑥ 자살, ⑦ 감염병이 공표된 상황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의 공개가 지자체의 지역안전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5년 7월 29일 2개 분야에 대한 시범공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이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되면서, 충청남도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전국 9개 도 단위 평가에서 충청남도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4등급으로서 하위 등급을 기록하였다. 특히 화재의 경우, 시 단위 평가에서 천안, 아산, 서산이 3등급, 공주, 보령, 논산, 당진이 4등급, 계룡이 5등급으로 평가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군 단위 평가도 마찬가지로 부여, 홍성, 태안이 2등급을 차지했으나 서천, 청양, 예산의 경우 3등급, 금산이 4등급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한 가장 최근 안전지수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석 결과 값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⁶⁾에서 제시하는 결과를 활용하였다.

5)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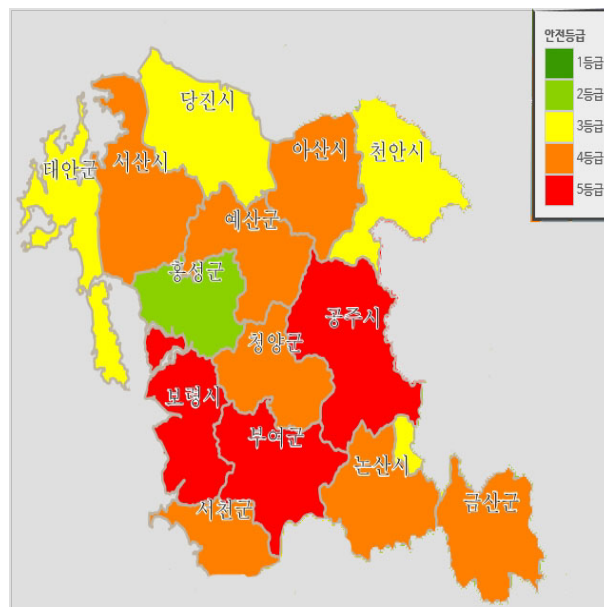
6)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http://www.safemap.go.kr> 내 “지자체별 안전지수 등급” 참조.

(1) 화재

화재 부문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4~5등급에 67%(10개 시군)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지어 1등급으로 화재에 안전한 곳은 어느 지역도 포함되지 않고, 2등급도 홍성군 한 곳만 해당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지역안전지수(화재)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0	없음
2	1	홍성군
3	4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계룡시
4	7	서산시, 예산군, 아산시, 청양군,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5	3	보령시, 부여군, 공주시



〈그림 3-6〉 지역안전지수 지도(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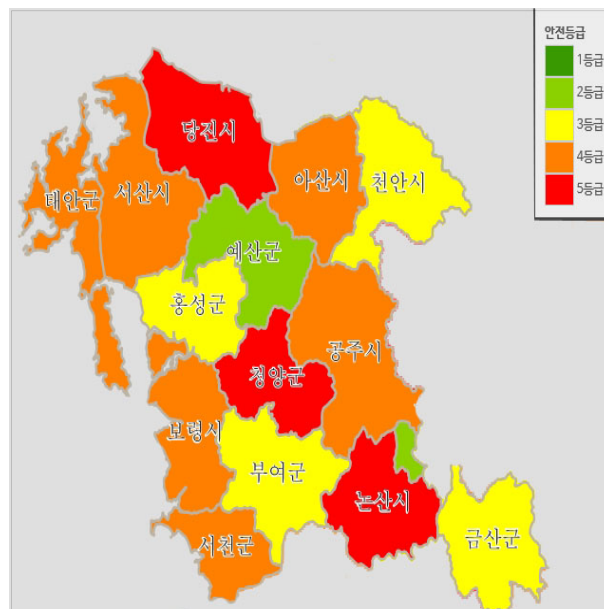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2) 교통

교통 부문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등급 지역은 없고, 2등급 지역은 겨우 2곳(예산군, 계룡시)이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부문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4~5등급에 60%(9개 시군)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해 보면 해안가와 주요 간선도로 등이 집중되어 있는 당진시, 청양군, 논산시가 집중적으로 교통 안전지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역안전지수(교통)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0	없음
2	2	예산군, 계룡시
3	4	천안시, 홍성군, 부여군, 금산군
4	6	태안군,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 서천군
5	3	당진시, 청양군, 논산시



〈그림 3-7〉 지역안전지수 지도(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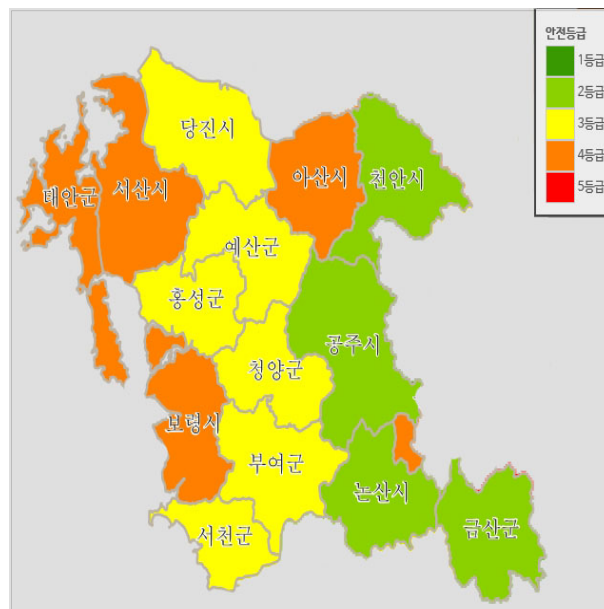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3) 자연재해

자연재해 안전지수의 경우는 해안지역이 다소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대체로 2~3등급으로 67%(10개 시군) 선정되었다. 자연재해 위험도는 홍수, 해풍, 태풍 등에 의한 풍수해가 지배적이며, 이에 대한 위험도이 충남지역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재해에 대비한 해안지역의 안전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3-4〉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0	없음
2	4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3	6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4	5	태안군,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계룡시
5	0	없음



〈그림 3-8〉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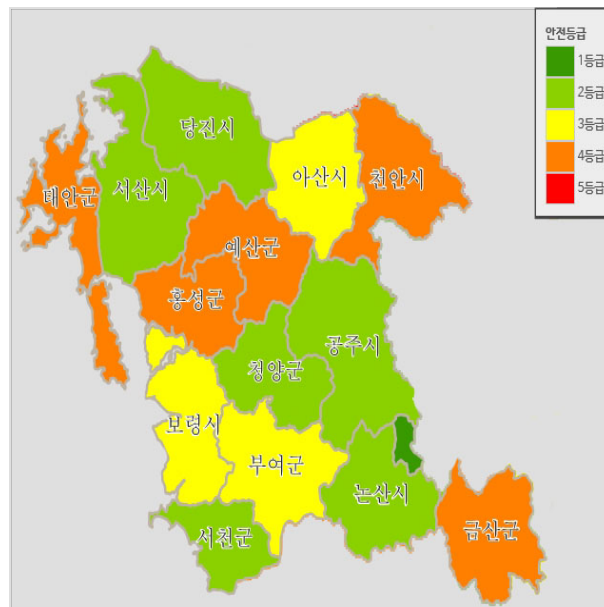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4) 범죄

생활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와 관련한 안전지수를 살펴보면, 계룡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범죄에는 다소 안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태안군을 비롯한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과 같은 농림어업 지역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CCTV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1	계룡시
2	6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논산시
3	3	아산시, 보령시, 부여군
4	5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금산군
5	0	없음



〈그림 3-9〉 지역안전지수 지도(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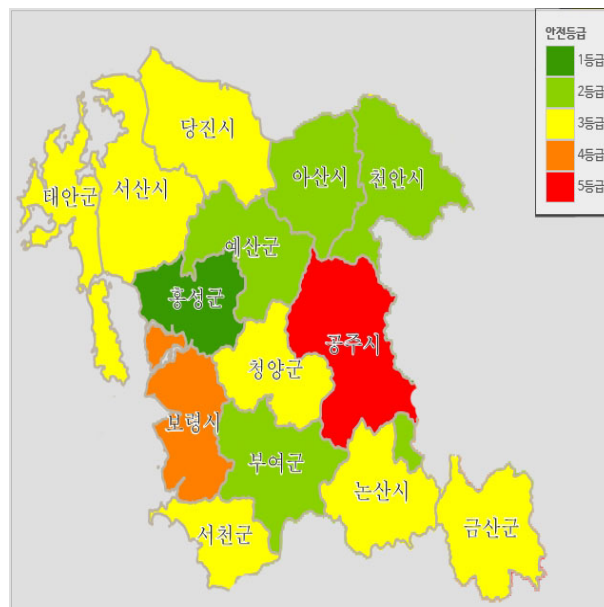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5) 안전사고

지역안전지수에서 다루는 ‘안전사고’는 수난, 폭발, 붕괴, 기계사고, 추락, 화학물질, 레저 활동 등 사고 구조구급 건수를 말한다. 생활안전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충청남도 지역의 안전지수를 살펴보면, ‘공주시’가 매우 위험한 등급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보령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공주시의 경우 지수 결과 값만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3-6〉 지역안전지수(안전사고)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1	홍성군
2	5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계룡시
3	7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4	1	보령시
5	1	공주시



〈그림 3-10〉 지역안전지수 지도(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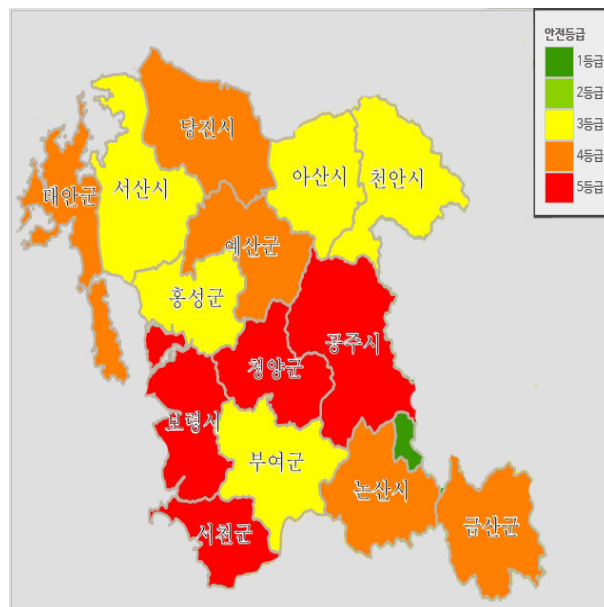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6) 자살

전국적으로 자살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를 충청남도 지역도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결론론적으로 안전지수 등급으로 살펴보자면, 4개 시군은 가장 최악의 5등급을, 그리고 추가 5개 지역이 4등급으로 지정돼 자살과 관련된 안전문화 조성이 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독거노인 및 생활고에 의한 자살 급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문화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 지역안전지수(자살)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1	계룡시
2	0	없음
3	5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부여군
4	5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논산시, 금산군
5	4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그림 3-11〉 지역안전지수 지도(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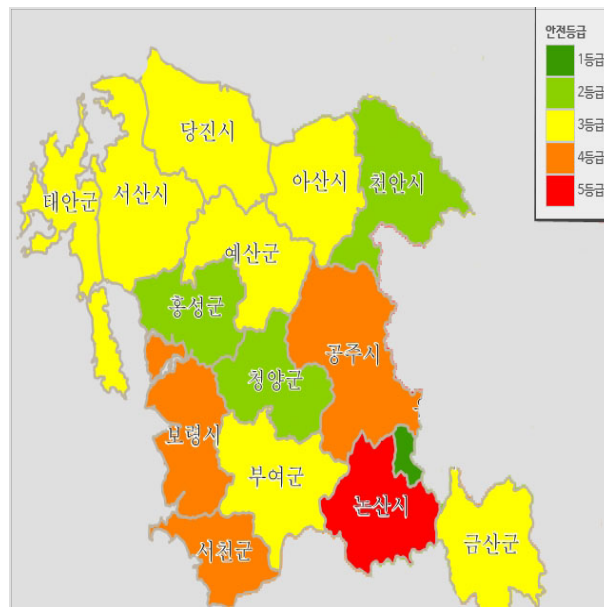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7) 감염병

감염병 관련 지역안전지수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를 통해 상향 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논산시가 유독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구제역 발발 및 그에 따른 2차 감염 증세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65세 이상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통해 감염병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배경이다.

〈표 3-8〉 지역안전지수(감염병) 등급별 지자체 현황

등급	개수	해당 기초 지자체
1	1	계룡시
2	3	천안시, 홍성군, 청양군
3	7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부여군, 금산군
4	3	보령시, 공주시, 서천군
5	1	논산시



〈그림 3-12〉 지역안전지수 지도(감염병)

출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2.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실태 분석

1) 지자체 중심의 안전문화 실태 및 특징

(1) 전담 조직 구성으로 집중적 운영

충청남도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도청의 재난안전실 내 ‘안전문화교육’팀이 조직되어 있다. 해당 팀은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팀으로서 기본적으로 안전문화 교육과 관련 내용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부차적으로는 안전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체험 교육 지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및 지원, 안전문화운동추진관련 법인등록 관리, 시군의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13〉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조직도

출처: 충남.넷(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표 3-9〉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세부 과업

구분	
안전정책	- 안전정책 기획·조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전지표 개발
민방위 비상대비	-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 총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화랑, 충무훈련 등 - 민방위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운영 등
민생사법경찰	- 민생6대분야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활동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계획 수립 운영 - 법률자문 행정지원
경보통제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행정업무 -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관리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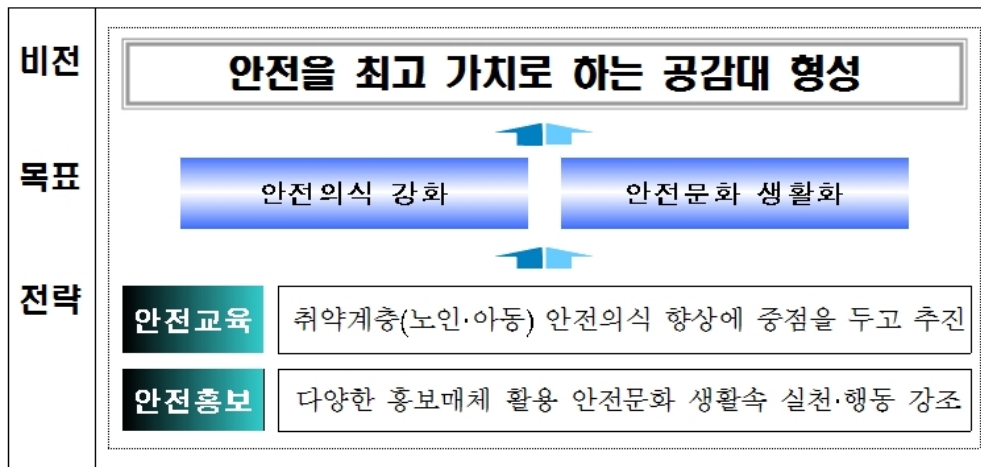
자료: 충남.넷(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2) 2016년 안전문화 추진 계획

충청남도의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안전문화교육)에서는 2016년 안전문화 추진을 도민 생활 속에 안전행동이 습관적으로 배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기분을 지키자”를 모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민관 협력 자율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로서 3년 이내 도민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은 50% 이상 달성하도록 안전문화 가치와 인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2016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추진 전략의 비전은 “안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1) 안전의식 강화, 2) 안전문화 생활화로 구성하였다. 결국 안전교육과 안전홍보에 대한 각각의 전략은 ‘취약계층(노인·아동)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안전문화 생활속 실천·행동 강조’로 설정하였다. (그림 3-14).



〈그림 3-14〉 2016 안전문화 교육홍보의 추진 전략

자료: 충청남도 안전문화교육팀 내부자료.

(3) 2016년 안전문화 분야별 추진계획

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충청남도의 도민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안전문화 교육을 받은 도민은 61.4%, 안전도 인식률은 43.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교육 우선대상은 고령자(34.6%), 아동 및 청소년(18.5%), 근로자(1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문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도 인식률 향상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을 다양화해야 하며, 교육 주체기관에 표준화된 안전문화 교육자료 배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청에서는 안전을 필수 불가결한 가치로 핵심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방향을 설정하였다(표 3-10).

특히 교육대상별 특성화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해결방안을 찾았는데, 고령자를 위한 교육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가정 및 건강 안전교육, 야외 활동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교육은 주로 체험교실을 통해 체험이나 실습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교통 및 놀이시설 안전사고, 학교 및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교육은 공동체별로 안전 관련 기반시설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표 3-10).

② 안전문화 실천 및 행동을 위한 기획홍보

충청남도 도민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한 정보습득을 주로 방송(34.7%), 인터넷(22.0%)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서 그 중 하나는 안전문화 진흥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정보 제공이다. 이는 기존에 관 주도의 “캠페인” 중심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형식의 다매체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매체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언론 기획보도, 전광판,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정기 간행물,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표 3-10〉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세부 내용

구분	
안전습관 내재화를 위한 안전 교육	어르신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 - 안전불감증 개선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 - 위해요소 제보요령, 안전문화 생활화 안전교육
	교통품격 높이기 교육 -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안전운전 및 응급대처 요령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안전교육 - 시설물 위험요소 사전점검으로 시설 안전강화 - 시설물 위험요소 사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재난대응 안전역량강화 교육 - 안전문화 생활화 위한 안전신고 생활화 유도 -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재난대비 훈련실무 등
	농업기계이용 안전교육 - 농기계 사고로부터 사용자 보호 - 도로 교통법규 및 농기계 기종별 안전수칙
	안전문화의식 역량강화 교육 - 안전문화 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생활화 정착 유도 - 위해요소 제보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리더 역할
	생활안전 실천교육 - 사전점검 및 안전신고 생활화 유도 - 관련 기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교육
	어선·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 어선사고예방 등 해양안전사고 최소화 - 현장 참여형 체험교육
	워크숍 연찬회 활용 안전교육 - 강사섭외 등 입안단계 시 사전 협의 지원 - 안전분야 강의 및 영상물 상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및 실습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 종합적인 안전체험 교육 - 참여자 발달수준에 맞춘 20개 분야별 체험교육
	안전체험관 운영 - 도민안전의식 제고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 - 화재, 구조구급 등 15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군, 교통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교육 - 불법주정차 등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실시
안전문화생 활화를 위한 콘텐츠 보급	동영상 제작 보급 - 공공장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의식 고취 - 2015년 안전한 충남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제작
	표준화된 안전문화교육 자료 제작, 배포 -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내용 수록 - 2015 사람이 제일인 안전충남 이렇게 실천 제작

자료: 충청남도 안전문화교육팀 내부자료.

〈표 3-11〉 안전문화 실천 및 행동을 위한 기획홍보 세부 내용

구분							
안전문화 진흥 및 재난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 안문협 참여 민간기업,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업하여 도민참여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점검) 안전강조주간에 직장 및 시설 및 가정 등 주체별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 (신고)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생활화 및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요소 즉각적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 도민들에게 친숙한 영상(이미지)을 통한 홍보 : 반기별 추진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 및 e-book 제작 보급 <table><tr><td></td><td></td><td></td></tr><tr><td>리멤버0416 세월호를 생각한다</td><td>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안전의식</td><td>사람이 제일인 안전충남(e-book)</td></tr></table>				리멤버0416 세월호를 생각한다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안전의식	사람이 제일인 안전충남(e-book)
							
리멤버0416 세월호를 생각한다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안전의식	사람이 제일인 안전충남(e-book)					
- 재난안전관련 ‘안전사고 예보’ 정보 제공 - 매주 안전사고 발생 위험 정보, 홍보전광판 활용 게시							
안전문화 캠페인 매체 다각화	언론미디어 활용 홍보	- 기획보도: 안전문화생활화정보 제공, 의식향상유도 - 지면(배너)광고: 실생활 안전정보 제공, 의식 개선					
	홈페이지 배너 게시	-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분야에 대한 시기별 선정, 안전강조주간에 집중 홍보					
	관공서 전광판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 도정 게시판 및 (전자)입간판 통한 홍보 - 도정신문을 통한 홍보					
	기타	- 안전문화 생활화 표어, 지방세 고지서 활용 홍보					

자료: 충청남도 안전문화교육팀 내부자료.

③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안전문화생활화를 위한 과제 발굴(27건) 및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구성은 66명의 위원으로 반기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한다. 상반기에는 분과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 성과 분석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차년도 운영방향 및 실천과제(안)을 예산 사항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과 해당 내용에 대한 전개가 핵심사항이다.

2016년 추진 전략상으로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크게 3가지의 활동 방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첫째, 조직화 및 활동 강화에 앞선다. 안문협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공동추진체를 구성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3대 핵심수단(점검, 교육, 신고)을 중심으로 자율적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안전문화 운동을 수행함께 있어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안문협은 안전의식 확산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핵심역할 수행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이 정책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본부에서는 안문협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하게 되며, 도와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 그리고 직장파 추진본부 구성을 유도하여 진행한다. 안전포럼의 경우 안전문화운동 민관 공동협력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굴한다.

둘째,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을 강화한다. 안문협의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주제를 선정,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 훈련, 워크숍을 통해서 팀워크를 다지고 최신의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셋째, 기업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다. 안전문화 사회공헌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업체가 확대된다. 각 분야별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는 기관별 홈페이지,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해 확산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를 시기별로 선정하고 안전강조주장과 연계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2)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및 특징

본 연구의 범위 설정에서 밝힌 것처럼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서해안을 접하는 해안지역과 그 외의 내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군, 내륙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문화 운동 실태를 분석한다.

(1) 충청남도 해안 지역

충청남도의 해안지역은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 5개 시·군이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도내 충남일보에서 검색된 최근 6개월의 기사들 중 실제 자발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펼친 4곳(태안, 서산, 홍성, 서천) 활동을 정리하였다.

① 태안군

- 태안소방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자치소방단 발대 (2016.09.01.)

태안소방서는 8월 30일 오전 11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소에 대하여 마을 자치소방단 합동발대식을 거행했다. 마을 자치소방단 발대는 원거리 농촌마을의 화재초기대응과 주민자치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초기 대응시설인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 마을에 자치 소방단을 구성·운영해 마을 주민의 자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청정 태안’ 주민과 관광객이 만들어내다! (2016.08.23.)

태안군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청정 태안’으로 거듭나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쓰레기 없는 태안 조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태안읍과 만리포, 꽃지, 몽산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깨끗한 태안 가꾸기 사업 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3200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깨끗한 태안 가꾸기 사업’은 충남도 주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과 연계 실시되는 것으로, 군은 지난달 ‘깨끗한 충남 만들기 지속 추진을 위한 시·군 특화사업’ 공모 결과 ‘쓰레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내 2위를 기록, 총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그림 3-15〉 청정 태안을 위한 주민 합동 활동(충남일보)

- 태안해경, 휴가철 맞아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2016.08.04.)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자체에서 채용 28개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태안해경 구조와 구급전문요원 8명으로 구성된 안전지원반을 운영 해수욕장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해 구조 능력을 향상에 도움을 주어 지자체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 ▲해상에서 익수자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합동TRS사용법과 유관기관 간 전파요령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애니(모형마네킹)와 AED(자동제세동기) 활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여름 성수기 신속한 인명구조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들의 안전과 즐거운 여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됐다.

- 태안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활동 시작 (2016.07.12.)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여름철 증가하는 피서객을 대비해 해수욕장 주변 피서객들의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운영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44일간 주요 물놀이 장소(만리포, 꽃지, 몽산포)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미아찾기 등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119응급의료소 운영, 소방안전체험장(소소심)을 운영해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의식 확대를 목표로 운영한다.



〈그림 3-16〉 태안군,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충남일보)

② 서산시

- 서산소방서, 폭염 속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근무 중 이상무! (2016.08.17.)

서산소방서(서장 김정호)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별천포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수난예방 활동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수난사고 예방활동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광복절 연휴로 별천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난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수변지역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또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동도 실시하는 등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 시민들 '호응' (2016.07.22.)



〈그림 3-17〉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충남일보)

서산시에서 운영 중인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직원과 각 사회단체와 주요도로변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가로순찰대를 매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등의 39개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우리 고장은 우리가 가꾸 나가자'라는 문화 확산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올해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에서는 도시정비 766건, 도로 분야 16건, 교통시설물 9건 등 총 798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서산시, 자율방재협의회 간담회 개최 (2016.06.29.)

서산시 자율방재단은 6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자율방재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칙 개정, 여름철 장마철 대비 활동 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또 서산시는 풍수해 보험 가입,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여름철 풍수해 재난대비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펼쳤다. 한편 430여명으로 구성된 서산시 자율방재단은 전문적인 방재활동을 위해 오는 7월에 ▲재난관리체계특강 ▲자율방재단 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홍성군

- 예고된 '치매전쟁터' 지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2016.09.02.)

홍성군 결성면에서 전국 최초로 기관과 민간단체가 합심해 올 3월 치매예방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치매예방을 위해 왕성한 활동 중에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삶의 마지막 질환인 치매유병률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아져 농촌이 예고된 '치매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심각성한 실정임을 인지하여 민·관 치매예방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성면 치매예방관리협의체는 결성면 소재 8개 기관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15개의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홍보, 인지강화 프로그램 지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예방수칙 및 체조 보급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정신건강 취약지 건강마을 만들기 '함께해 유(you) 마음튼튼 학교' 운영 (2016.08.23.)

홍성군보건소는 우울감이 높고 칙거노인이 많은 마을 1곳을 선정, 8월부터 11월까지 정신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인 '함께해 유(YOU) 마음 튼튼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함께해유(YOU) 마음 튼튼 학교는 홍성자원봉사센터, 홍성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상자

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그동안의 보건사업과 달리 칩거 노인까지 아우르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제공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정신건강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 ▲우울, 스트레스 정신건강사전검사, ▲한방진료 및 여러 가지 신체활동이 제공되며 ‘소통과 나눔’의 기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공모전(그림, 표어, 사진, 수필, 3행시, 4행시 등)과 공모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프로그램 미 참여 칩거노인에 대한 ▲개인별 가정방문, ▲1:1 상담 및 개인행동요법 지원, ▲우울증 유증상자 병원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개인별로 접근하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서천군

- 온(on) 동네방네 성료 (2016.09.08.)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한달간 이어진 자원봉사 릴레이사업 ‘자원봉사 온(ON) 동네방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그림 3-18〉 서천군, 자원봉사 온(ON) 동네방네 활동(충남일보)

지난 7월 28일 160여개 단체 참여로 발대식을 갖고, 지난달 1일 노박래 군수 가족이 ‘3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일까지 총 2,9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2,000여명 이상 증가하였다. 가족단위로 이루어진 골든3형제, 초록이삼남매, 내음다원, LES사랑 등 가족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족뿐 아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서천휴먼시아어린이집 교사, 서천신희, 비인신희, 한산신희과 재향군인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등과 같은 단체들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됐다.

(2) 충청남도 내륙 지역

충청남도의 내륙 지역은 당진시를 비롯한 아산시, 천안시 등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10개 시군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도내 충남일보에서 검색된 최근 6개월의 기사들 중 실제 자발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펼친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① 당진시

- 당진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2016.07.14.)

당진시가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다. 아동안전지도는 초등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요인을 조사하는 체험학습이다. 대상 학교로 선정된 곳은 원당, 탑동, 송산, 서정, 송악초등학교로 해당 학교의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와 당진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당진가족상담센터와 함께 안전지도제작 체험에 나선다.

지도제작 과정은 사전준비단계와 지도제작 단계, 안전지도 활용단계로 나뉘 실시될 예정으로, 사전준비단계에서는 대상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1시간 정도 조사가 가능한 범위 설정이 이뤄진다.

또 참여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위험·안전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되며 본격적인 지도제작 단계에서는 안전지도의 개념과 제작 과정, 안전한 공간과 위험한 공간 등 안전지도제작에 필요한 사전교육 이후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돌며 픽토그램을 활용해 지도상에 안전·위험공간을 표시하게 된다.

- 당진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출범 (2016.07.11.)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7일 왜목마을에서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다.

당진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30일부터 스쿠버장비 활용 구조 기법 숙달훈련, 수상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물놀이 안전지도 요령 등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을 실시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4명의 시민수상구조대원이 난지도해수욕장, 왜목마을해수욕장에 대하여 예방순찰과 인명구조, 환자응급처치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수변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② 청양군

- 마을 화재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킨다! (2016.09.07.)

청양군 대치면은 6일 오후 2시 원형산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자치소방단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는 원거리 농촌마을의 화재 초기대응과 주민자치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호스릴소화전이 설치된 마을에 자치소방단을 운영하고자 마련돼 이흥규 형산리장과 형산리 마을 주민 3명이 마을 자치소방단원으로 위촉됐다.

발대식 후에는 마을회관 화재발생 가상 상황을 부여해 마을 자치소방단원들의 마을주민 초동 대처능력 향상 및 호스릴소화전 숙달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또 청남면(면장 황희선)도 지난 5일 인양리와 왕진1리 2개 마을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자치소방단 발대식을 가졌다.

③ 공주시

- 공주시, LP가스시설 자율 안심 순찰 활동 (2016.09.12.)

공주시 추석 명절을 맞아 13일까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시설 안심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림 3-19〉 공주시, 자율 안심 순찰 활동(충남일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충남도협회 공주시지회와 합동을 실시하는 이번 순찰활동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설, LPG 특정사용시설, 노후

주택, 전통시장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충전시설의 살수 장치, 긴급 차단장치 등이며, 판매시설 및 특정사용시설은 화기화의 이격거리 준수 가스누출 경보 등이다.

④ 논산시

-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구조활동 돌입 (2016.07.06.)

논산시는 관내 유원지를 찾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논산시 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그림 3-20〉 논산시, 시민수상구조대 교육(충남일보)

논산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2일 교육훈련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으며 이날 훈련은 시민수상구조대, 연산 119센터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을 진행했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논산시민수상구조대는 8월까지 관내 유원지 일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며, 예스민유원지 상류 체육공원 및 용바위보유 원지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에는 고정배치돼 활동에 돌입한다. 또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및 수변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3.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특징 및 시사점

1)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서 우선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하여 전국을 비교하는 중요 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안전환경을 분석하였다. 안전환경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파악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만, 외국인 비율과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안전환경에 있어서는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당장 외국인의 경우는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한 가장 최근 안전지수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석 결과 값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에서 제시하는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시군구 지역간 안전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역안전지수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내 시군의 안전환경을 비교해 보면, 화재와 교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이는 비단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및 의식 및 대응, 대처 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안전지수의 그 외 부문 특히 자연재해 부문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생활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부문의 경우 태안군을 비롯한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과 같은 농림어업 지역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난, 폭발, 붕괴, 기계사고, 추락, 화학물질, 레저 활동 등 사고 구조구급 건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 사고’ 부문의 경우, ‘공주시’가 매우 위험한 등급을 보이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와 유사한 결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논산시’의 경우 감염병과 관련한 등급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정 부문에 대한 관심과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생활고에 의한 자살 급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문화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각 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청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안전문화교육팀’을 조직하여 안전한 충남이 전국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활동하고 있다. 행정적인 틀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세부 전략들이 치밀하게 수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안전문화 의식 조성을 위한 비전과 세부 목표를 뒷받침하는 기초 지자체 중심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주요 기초 지자체 안전문화 운동 실태

해안 지역	태안군	- 태안소방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자치소방단 발대 (2016.09.01.) - ‘청정 태안’ 주민과 관광객이 만들어내다! (2016.08.23.) - 태안해경, 휴가철 맞아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2016.08.04.) - 태안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활동 시작 (2016.07.12.)
	서산시	- 서산소방서, 폭염 속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근무 중 이상무! (2016.08.17.) - 서산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 시민들 ‘호응’ (2016.07.22.) - 서산시, 자율방재협의회 간담회 개최 (2016.06.29.)
	홍성군	- 예고된 ‘치매전쟁터’ 지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2016.09.02.) - 정신건강 취약지 건강마을 만들기 ‘함께해 유(you) 마음튼튼 학교’ 운영 (2016.08.23.)
	서천군	- 온(on) 동네방네 성료 (2016.09.08.)
내륙 지역	당진시	- 당진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2016.07.14.) - 당진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출범 (2016.07.11.)
	공주시	- 공주시, LP가스시설 자율 안심 순찰 활동 (2016.09.12.)
	논산시	-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구조활동 돌입 (2016.07.06.)
	청양군	- 마을 화재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킨다! (2016.09.07.)

2) SWOT 분석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살펴 본 충청남도의 현 시점 안전문화 운동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SWOT분석을 수행하면 다음 <그림 3-21>과 같이 분석되며, 그 결과에 의한 전략은 SO전략-WO전략-ST전략-WT전략 수행이 가능하다.

① 강점 Strengths

- 충청남도청 안전문화교육팀 및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직의 신설
- 기초 지자체별 활발한 안전문화 활동
- 협의회의 정기적인 활동 재가동

② 약점 Weakness

- 매년 아이디어 중심의 연계성이 약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 기초 지자체의 연계성 낮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③ 기회 Opportunities

- 국민안전처 차원의 지역컨설팅 지원
- 범 정부 및 시민들의 안전정책에 대한 갈증

④ 위협 Threats

- 홍보 및 캠페인,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
- 총체적으로 낮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 외국인, 고령자 비율 증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강점(Strengths) • 충남도청 안전문화교육팀 조직 신설 • 기초 지자체별 활발한 안전문화 활동 • 협회회의 정기적인 활동 제가동	약점(Weaknesses) • 매년 아이디어 중심의 연계성이 약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 기초 지자체의 연계성 낮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기회(Opportunities) • 국민안전처 차원의 지역컨설팅 지원 • 법 정부 및 시민들의 안전정책에 대한 갈증	SO 전략 • Top-Down 전략: 도 차원의 전략 수립 • Bottom-Up 전략: 시민 중심의 전략 수행 • 전략수립 및 집행의 네트워크 전략	WO 전략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안전컨설팅 적극 활용 •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및 운영
위협(Threats) • 홍보 및 캠페인,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 • 총체적으로 낮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 외국인, 고령자 비율 증가	ST 전략 • 도 차원의 조직적인 안전문화교육 내용 홍보 및 안전의식 전개 활성화 •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안전문화운동 전파 및 의식 강화 전략	WT 전략 • 외국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 지역별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안전문화 조성 활동 전개

〈그림 3-21〉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실태 SWOT 분석

SWOT분석에 의한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세부 전략은 <그림 3-21>처럼 수립되어야 한다.

○ SO 전략

- Top-Down 전략: 도 차원의 전략 수립
- Bottom-Up 전략: 시민 중심의 전략 수행
- 전략수립 및 집행의 네트워크 전략

○ WO 전략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안전컨설팅 적극 활용
-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한 안전문화운동 설계 및 운영

○ ST 전략

- 도 차원의 조직적인 안전문화교육 내용 홍보 및 안전의식 전개 활성화
- 취약 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안전문화운동 전파 및 의식 강화 전략

○ WT 전략

- 외국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 지역별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안전문화 조성 활동 전개

제4장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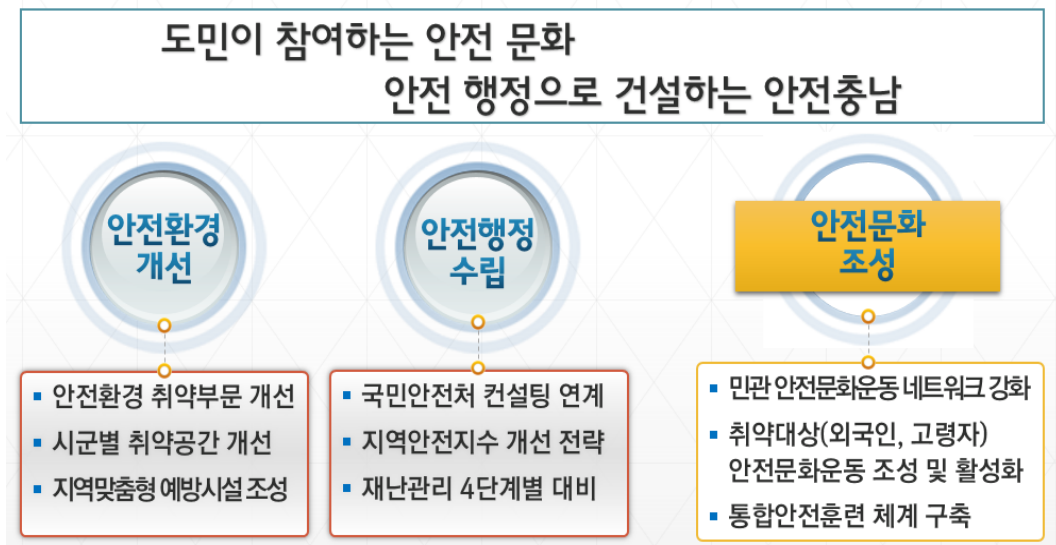
‘문화’를 조성하는 과제는 끊임없는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업이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수준까지 향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정착되며, 그 결과로 안전성고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류영아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림 4-1>과 같은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은 연구의 서두에 밝힌 안전문화 발달과정과 같이 각 단계별 1) 안전문화 도입기, 2) 안전문화 도약기, 3) 안전문화 성숙기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안전문화 도입기에는 기본적인 안전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활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행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비로소 안전문화 조성의 초기 기획과 그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도약기에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행정을 기반으로 안전환경이 개선되고 결국 안전문화 조성이 촉진되기에 이른다. 최종적인 충청남도 안전문화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춘 안전환경 개선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지역별 자치화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안전 행정으로 건설하는 안전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방안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환경과 안전행정이 완성된 모습으로 갖춰갈수록 안전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틀로 삼는다.



〈그림 4-1〉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



〈그림 4-2〉 ‘안전한 충청남도 만들기’ 기본 방향

2. 전략별 정책과제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해 보면, 우선 안전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안전행정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1) 안전환경 개선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을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약한 부문 및 물리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환경 취약부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인된 취약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에 알맞은 예방시설의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1) 안전환경 취약부문 개선

우리나라 사망자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환경 취약부문은 바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다. 특히, 각 지역별, 지구별, 이용시간대별 이동하는 인구 구조에 의해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취약지점은 오랫동안 관리되어 오고 있긴 하다. 다만, 지역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취약지점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비율이 낮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발현되는 교통 취약지점을 뒤늦게 발견하여 대처하는 한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사망자수가 많지는 않지만 교통 사고 유발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점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동절기의 빙판길 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위험천만한 예방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지점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요행으로 안전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사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한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인구 구조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어르신들의 4륜 구동차에 대한 특별 도로⁷⁾를 개설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7) 예방시설의 환경 개선이 선순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 4단계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난관리 4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순환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기본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법을 구성하고 있다.

(2) 시군별 취약공간 개선

충청남도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선 (1)항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조성되어야 하는 항목을 거론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충청남도의 기초 지자체별 지역의 특징에 지리적, 지역적 취약 공간에 대한 개선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내륙과 해안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 안전환경의 관심 대상 지역은 주로 내륙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다. 이는 물론 내륙 지역에 인구의 집중적인 분포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지역 안전정책을 위해서는 해안 및 섬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사실, 섬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빈번하지 않게 운행하는 배편에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실 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주요 시군별 취약 공간 검토 및 분석에 해안 및 섬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 수립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점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여겨진다.

(3) 지역맞춤형 예방시설 조성

충청남도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은 바로 ‘예방시설’ 조성이다.

현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기존의 무더위 쉼터, 이재민 구호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다. 이 같은 시설은 평상시에 위급하게 사용한 후 관리 미흡이나 방치 등으로 제대로 필요한 시점에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전략과제에서 현재의 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설혹 현재 관리 상태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사에 점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다.

더불어, 앞서 밝힌 재난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에 관련된 시설을 치밀하게 조성하고 평상시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한다.

8) 이는 국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전거도로보다 더욱 안전하면서 선도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이টে으로 여겨진다.

2) 안전행정 수립

(1) 국민안전처 컨설팅 연계 방안 수립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은 국민안전처를 위시하여 각 지자체별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안전정책 중 안전정책 기획 및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광역시 소재)에서 각 부문별 재난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실제 우리나라 국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행정 지원책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컨설팅 제도는 2015년 하반기부터 공포된 지역안전지수에 의한 자체 점검에 의한 안전 컨설팅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10곳의 기초 지자체가 해당 컨설팅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안전 환경 개선 및 컨설팅에 의한 정책 수립을 도움받고 있다.

(2) 지역안전지수 개선 전략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수년간 연구와 공신력있고 방대한 공식 데이터를 취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공포한 바 있다. 경제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일 주식시장의 코스닥 지수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지역안전지수는 모두 9개 부문의 각 부문별 안전지수를 게시하고, 지역별 종합안전지수를 제시해 준다. 하지만, 그 갱신 시점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명예가 한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지역안전지수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충청남도도 현재의 등급과 각 지역별 취약 등급을 받은 특정 부문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3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정 기초 지자체에는 특정 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재난관리 4단계별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는 현재 4단계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정설이다. 그 체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구와 동시에 일상적인 예방이 맞물려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재난관리 4단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한 구조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각 4단계의 단계별 대응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기존의 재난관리 방안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 캠페인, 홍보가 더욱 선진적인 안전환경 도모에 힘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나 안전 캠페인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안전문화 조성

(1) 민관 안전문화운동 네트워크 강화

앞서 제시한 안전환경 개선과 안전행정 확립이 수행되면 기본적인 안전문화 조성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선 두 가지 부문의 정책을 완성해 간다면 충청남도는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는 셈이 된다.

이러한 기본 요소가 확충되면, 민간과 관 주도의 정책이 협심하여 민관 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약 5~6년 전 유사한 형태의 민관 안전문화운동 네트워크가 유행처럼 조성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훈련이나 교육, 조직의 활동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고, 비상시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성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문화운동 네트워크가 조성되면, 각 지역별로 안전공동체(직장 및 그룹 단체 등)를 세부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그 사례로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이 최근 성행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2) 취약대상(외국인, 고령자) 안전문화운동 조성 및 활성화

대부분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가운데 소외되는 영역이나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소외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정책 수립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앞서 지역의 현황 및 특징에서 확인한 바처럼 특정 시군 지역에 외국인의 비율이 적지 않은 편이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문화운동 및 실천 과제를 수립함에 있어서도 고령자와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관점과 정의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는 대피소 및 안내 방송, 위급한 상황에서의 외국어 지원 정책에 대한 대비는 어떠한 상황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나마 최근에 119 신고에 의한 다국어서비스가 일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는 아직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경우의 안전정책이 비일비재한 편이다. 이에 대한 점검은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방안은 중장기적인 접근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인 셈이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정책을 입안하는 관 주도의 행정이 실제 고령자들의 삶과 생활 속에 녹아들어 실질적인 체험형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더위쉼터 및 한파대피를 위한 보호소가 누락된 곳은 없는지, 작은 마을 단위에서 소외되는 고령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오히려 빈 집 발생으로 인해 제2차, 제3차의 범죄나 불안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통합안전훈련 체계 구축

안전문화조성의 꽃은 역시 통합안전훈련이 체계적으로 수행됨으로서 일상 생활을 비롯한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선행되는 환경 개선과 요구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인 안전조직 및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통합안전훈련 체계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단발적, 요식행위와 같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가까운 예방 훈련 및 교육, 체험을 통해서 시민의 행동과 체험학습에 의한 태도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문화운동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충청남도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국내외 안전문화운동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안전문화운동 및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문화 조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문화’를 조성하는 과제는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수준까지 향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정착되며, 그 결과로 안전성고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류영아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서 우선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하여 전국을 비교하는 중요 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안전환경을 분석하였다.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만, 외국인 비율과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안전환경에 있어서는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당장 외국인의 경우는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시군구 지역간 안전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역안전지수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내 시군의 안전환경을 비교해 보면, 화재와 교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이는 비단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및 의식 및 대응, 대처 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안전지수의 그 외 부문 특히 자연재해 부문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생활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부문의 경우 태안

군을 비롯한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과 같은 농림어업 지역이 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난, 폭발, 붕괴, 기계사고, 추락, 화학물질, 레저 활동 등 사고 구조구급 건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 사고’ 부문의 경우, ‘공주시’가 매우 위험한 등급을 보이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와 유사한 결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논산시’의 경우 감염병과 관련한 등급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정 부문에 대한 관심과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생활고에 의한 자살 급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문화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각 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청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안전문화교육팀’을 조직하여 안전한 충남이 전국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활동하고 있다. 행정적인 틀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세부 전략들이 치밀하게 수행되고 있다.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살펴 본 충청남도의 현 시점 안전문화 운동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SWOT분석을 수행하여 SO전략-WO전략-ST전략-WT전략 등 가능한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서 1) 안전문화 도입기, 2) 안전문화 도약기, 3) 안전문화 성숙기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문화 도입기에는 기본적인 안전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활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행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비로소 안전문화 조성의 초기 기획과 그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도약기에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행정을 기반으로 안전환경이 개선되고 결국 안전문화 조성이 촉진되기에 이른다. 최종적인 충청남도 안전문화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춘 안전환경 개선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지역별 자치화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안전 행정으로 건설하는 안전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방안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환경, 안전행정,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비전 설정을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현황을 도 행정 차원에서만 거칠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다소 불분명한 원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없지 않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 배경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용도로 추후 연구나 분석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실천과제들이 제시된 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안 및 추진 전략들이 매우 참신하거나 새롭게 제시되는 사항이 아닌 것도 일부 포함된다. 만약 이와 같은 결론이 식상한 정책이나 전략이라고 비판이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마냥 자유로울 수 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 조성 방안은 도입기, 도약기, 조성기의 3단계를 중장기간 동안 꾸준히 수행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제안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지는 않다는 위로를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 향후에도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나 인구 구조에 의한 해석은 다소 사회과학적이고 지리적, 도시계획적 접근을 수행한 것으로 안전환경에 대한 공학적이거나 정량적인 분석이나 접근과는 다소 다른 해석 결과를 유추했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주의를 요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에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한 축적된 연구 방법론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과학적인 다소 정성적인 분석이 향후 연구에도 중요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안전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국래, 2005, 국가재난안전교육체계의 혁신전략, 중앙소방학교.
- 김규원, 2014, 충청북도 안전문화 정착 방안, 충북포커스 97호, 충북발전연구원.
- 김근영, 2012,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행정안전부.
- 김석택, 김미정, 2005, 소방체험교육을 통한 소방안전의식 증진 방안, 울산발전연구원.
- 김승호, 윤석준, 양혁승, 2015, 안전문화(재난예방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도서출판 주윤.
- 김은경, 2016, 인천 지역 안전환경 현황 및 재난관리 개선방안, IDI 도시연구 10호, 인천발전연구원.
- 나채준, 20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나채준, 20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65, 361-383.두산백과, 하인리히의 법칙.
- 류현숙, 2012, 스마트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민간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문창국, 2015, 한국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석진, 2007, 시민안전체험교육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선, 2006, 재난대응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반한성, 2008, 안전체험시설 비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기환, 2014,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송병길, 2016,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시민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안규호, 2007, 재난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금호, 김경상, 성기환, 문현철, 2008, 안전문화활동 그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방재학회지 8(2), 44-52.
- 유재명, 2015, 스마트 재난관리를 위한 민간봉사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종현, 201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정책연구 15(4), 1-22.
- 이상영, 2006,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상희, 2005, 어린이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제도와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
- 이인형, 2003, 청소년 소방체험교육을 통한 화재안전의식 증진 방안.

- 이형복, 2015,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의식제고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15-72, 대전발전연구원.
- 장재구, 2003, 소방체험 프로그램이 어린이 안전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소방학교.
- 정상만, 윤성규, 2014, 국가 '재난안전문화 정착' 힘써야, 한국방재학회지 14(3), 4-11.
- 최영희, 2010, 소방안전 체험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호진, 오윤경, 201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99,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방안.
- 홍재봉, 2016, 도농 복합도시 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록, 2007,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연계한 체험식 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은경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공동연구 · 김희태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김민지 서울대학교 석사수료

전략연구 2016-07 · 충청남도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

글쓴이 · 김은경, 김희태, 김민지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4(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978-89-6124-348-3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